

Vol.98

2022  
FALL

# 열린 충남

권두언

힘센충남, 대한민국의 힘을 말하다

특집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남 철도망 구축 전략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의 전국적 의의

충남 해양레저관광 정책 방향과 과제

탄소중립 경제, 위기인가 기회인가

민선 8기 충청남도 시군별 핵심사업

#권두언	04	힘센충남, 대한민국의 힘을 말하다   김태흠 충남도지사
#특집	07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남 철도망 구축 전략   이호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의 전국적 의의   홍원표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충남 해양레저관광 정책 방향과 과제   홍장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탄소중립 경제, 위기인가 기회인가   강석태 카이스트 교수
#민선 8기 핵심사업	30	민선 8기 충청남도 시군별 핵심사업
#열린마당	58	오늘도 깊어저만 가는 농민들의 주름살   임선택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사무국장
#언론이 바라본 충남	62	필요충분조건 충남공항   박계교 대전일보 충남취재본부장
#인권 A to Z	65	충남연구원의 인권경영 수준, 어디까지 와 있는가?   강마야 충남연구원 인권경영센터장 외
#연구원 소식	71	충남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 대기질 개선 정책 마련 위해 한 자리에 한산모시 전통농업,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돼야 포스트코로나 시대, 자영업자 활성화 정책 필요 지난 5년간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원 총 637건, 12조 원 넘어 동서트레일의 서축, 한국판 산티아고 순례길로 조성



**발행일** 2022년 9월 **발행인** 유동훈 **발행처** 충남연구원 **편집위원장** 오용준 **편집위원** 권미정, 김진영, 백운성, 여형범, 조봉운 **에디터** 정봉희, 최정임

**주소** 우)32589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금홍동) **전화** 041.840.1114 **팩스** 041.840.1129 **홈페이지** www.cni.re.kr **편집·제작** (주)열린문디자인

문의사항은 chloe@cni.re.kr로 연락바랍니다.

## 힘센충남, 대한민국의 힘을 말하다

‘충남’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느릿느릿 뒷집 지며 걷는 양반 혹은 아무렇게나 대해도 군말 없는 사람이 연상되지 않는가. 아니면 무색무취라서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는가. 하지만 내가 아는 충남, 충남인은 그렇지 않다. 역동적이고 목직하다. 욕심이 있고 쉽게 물러서지 않는다. 성실하고 근면하게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사람들의 고장, 그것이 내가 아는 충남이다. 충남에 대한 사회의 통념을 바꾸고, 충남의 높은 잠재력을 발현하기 위해 2022년 7월 1일 ‘힘센충남’은 태동했다. 도민의 염원을 받들고 충남의 새 역사를 쓰기 위해 나는 그날 ‘힘센충남’의 키(舵)를 부여잡았다.

민선 8기 충남의 비전은 ‘힘센충남, 대한민국의 힘’이다. ‘힘센충남’에는 파워풀한 도정을 펼치고 역동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강한 포부가 담겨 있다. ‘대한민국의 힘’에는 충남이 대한민국 핵심으로서 국가를 선도하겠다는 뜨거운 열망이 실려 있다. 충남의 힘찬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라는 도민의 의지가 도정비전에 집약된 것이다.

5대 도정 목표는 이 머릿속의 비전을 손에 와닿는 현실로 만들기 위해 수립되었다. 5개의 퍼즐이 맞춰지는 과정에서 힘센충남의 큰 그림은 완성될 것이다.

**첫째,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이다.**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이다. 기후변화와 4차 산업혁명 이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이 변화의 흐름을 주도면밀하게 읽고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겠다.

먼저 미래차, 바이오, 2차 전지 등 미래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겠다. ‘탄소중립경제 특별도’로서 실질적인 화력발전소 폐지 대응책을 모색하며 탄소중립경제도 선도하겠다. 경제성장의 토대인 광역교통망도 획기적으로 확충하겠다. 민생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지역금융도 활성화하겠다. 50년 비전으로 충남의 경제산업 지도를 새로 쓰고, 강한 경제의 초석을 놓을 것이다.



김태흠 | 충남도지사

**둘째,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이다.** 지역 불균형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막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지역 균형발전으로 새로운 성장의 돌파구를 마련하겠다.

천안·아산은 대한민국 디지털 수도로 만들고, 서해안 지역은 국제해양 레저관광벨트로 조성하겠다. 홍성·예산은 내포 혁신도시를 완성하고, 공주·부여·청양은 문화명품 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 계룡·논산·금산은 국방특화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겠다.

지역 발전의 주역인 미래산업 인재도 키워나가겠다. 고령 은퇴 농어민 정년제와 농어촌 주거 공간 재정비 사업으로 젊고 스마트한 농어업을 만들겠다. 해양바이오, 레저관광 등 해양 신산업도 적극 육성하겠다. 지역의 특색과 특징에 맞는 맞춤형 발전전략을 통해 충남을 지방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셋째, ‘함께 하는 따뜻한 공동체’이다.** 현대사회는 위험과 불안이 상존하는 사회이다. 보육과 의료, 노후와 일상에 대한 불안이 사회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 이에 견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안심사회를 만들겠다.

사회복지망의 접근성을 높이고, 균등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다. 사각지대 없는 의료체계와 도민 안심안전체계를 빈틈없이 가동할 것이다. 일하는 복지와 맞춤형 복지를 통해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를 향해 나아가겠다.

**넷째, ‘가치 있고 품격 있는 삶’이다.** 경제적 풍요를 넘어 문화적으로 성숙한 사회가 내가 꿈꾸는 충남이다. 모든 도민이 문화예술·체육·관광을 공정하게 누리도록 하여 그 꿈을 실현하겠다.

충남의 역사와 문화를 새롭게 정비하고, 서해안 관광벨트를 구축하겠다. 문화예술 인프라를 확충하고, 체육활동의 저변도 확대하겠다. 문화와 관광, 체육의 시선으로 충남을 새롭게 디자인하여 충남의 브랜드 가치와 도민의 품위를 높ی겠다.

**다섯째, ‘우리 뜻이 통하는 충남’이다.** 김태흠 도정의 존재 이유는 도민이다. 오직 도민만을 바라보고 도민을 위해 일하는 조직을 만들겠다. 충남 남부출장소를 설치하여 도민행정서비스 불편을 최소화하겠다. 공공기관을 도민에게 개방하고 충남인재개발원의 공공교육을 강화하겠다.

‘힘센충남’의 강한 추진력은 참여와 소통, 그리고 디지털 행정에서 나온다. 행정조직을 혁신하여 자율과 책임의 도정 시스템을 구축하겠다. 메타버스 도청 설치, 충남데이터센터 신설과 함께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 지방정부도 구현하겠다.

김태흠 도정은 이렇게 5대 도정목표인 강한 경제, 지역 균형발전, 따뜻한 공동체, 품격 있는 사회,



그리고 디지털 행정을 충남 발전의 강한 엔진으로 삼아 '힘쎈충남'을 빠르고 강하게 실현할 것이다. '대한민국의 힘'으로서 충남의 목직한 존재감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 도약의 과정에서 충남이라는 브랜드의 가치도 높이 올라갈 것으로 기대한다.

끝으로 비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전의 공유(shared vision)이다. '힘쎈충남, 대한민국의 힘'이라는 도정 비전이 220만 도민의 머리와 마음속에 살아 숨 쉬길 희망한다. 집단적 힘이 충남을 바꾸고 대한민국을 바꾸는 큰 힘이 될 것이다. 민선 8기 4년을 넘어 향후 50년, 100년의 미래를 여는 힘이 되리라 믿는다. 충청남도의 새 역사에 많은 도민께서 힘을 더해주시길 희망한다.



## 특 집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남 철도망 구축 전략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의 전국적 의의

충남 해양레저관광 정책 방향과 과제

탄소중립 경제, 위기인가 기회인가



#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충남 철도망 구축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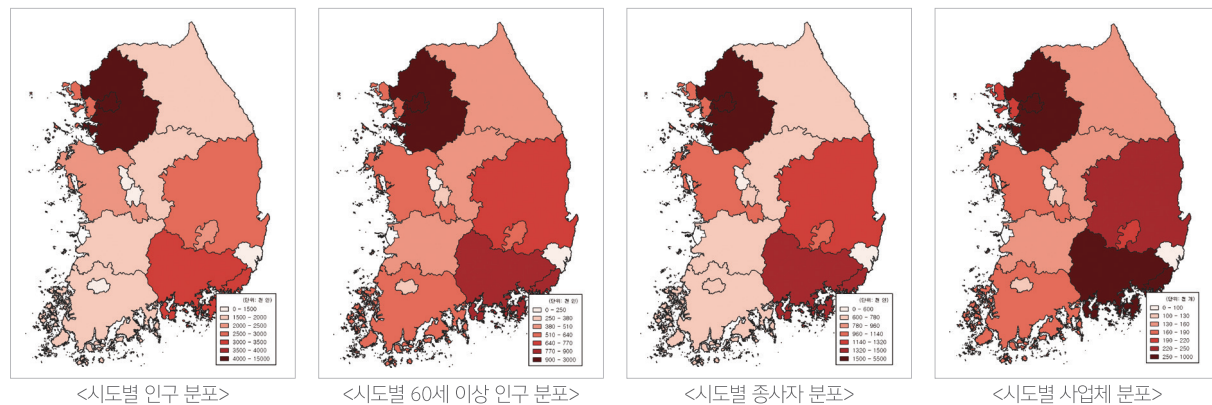
이호 | 한국교통연구원 철도교통연구본부장

## 들어가며

2020년 기준 전국 인구의 50.2%, 전국 지역 내 총생산의 52.6%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정부는 수도권 집중 억제에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수도권의 경제활동 인구, 취업, 투자 및 기업활동 등 경제활동 집중도는 점점 심화하고 있다.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수도권, 충청권, 제주를 제외하고 호남권, 강원권, 영남권의 지역 내 총생산 비중은 0.3%~5.6% 감소하였다. 수도권에 인구 및 경제력이 집중된 상황에서, 저성장,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 지방소멸 등 국가적 당면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화를 막을 수 있는 지속가능한 국가균형발전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많은 연구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요인을 제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은행(World Bank)은 지역성장을 위해서 지역의 규모 확대, 교통접근성 단축, 특화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인적자원, 교육훈련, 공공기관, 생활인프라, 교통망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도로, 철도 등 교통SOC 시설 확충은 꼭 필요하다. 이는 교통SOC 확충을 통하여 교통 접근성이 개선되고, 이는 지역 간 물적·인적 교류 확대로 이어져 지역 발전을 견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그림 1 | 시도별 인구, 60세 이상 인구, 종사자, 사업체 분포(2020년)



새 정부는 지역 간 이동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차별 없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였다. 특히,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 중에서 빠르고 편리한 교통혁신을 위하여 GTX 추진을 통한 수도권 30분 출퇴근 시대, 광역철도 등을 통한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 조성, 기존 철도 구간의 고속화 등을 통한 전국 2시간 생활권 조성을 제시하고 있다.

지방정부에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철도사업 추진에 관심이 높다. 충청남도는 민선 8기를 맞이하여 “힘센충남 대한민국의 힘” 비전을 바탕으로 5대 목표와 20대 전략을 발표하였다. 특히, 도정과 제에 GTX-C 천안·아산 연장, 충청 내륙철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아산만 써클형순환철도, 내포태안철도, 충청산업문화철도 등 철도건설 사업 추진을 통한 충남발전을 기대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충남 민선 8기에서 구상하고 있는 철도사업에 대한 주요 이슈를 진단하고 추진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그림 2 | 민선 8기 혁신적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관련 도정과제



출처 : 민선 8기 도정운영 방향 및 도정과제 도민보고회 자료, 2022.06.30.

## 충남 철도망 사업 및 주요 이슈

### GTX-C 천안·아산 연장

정부는 수도권 출·퇴근 통행시간과 거리 증가에 따른 삶의 질 저하를 해결하기 위하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 B, C 사업을 기획 및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 교통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구축 계획노선의 연장 및 신규노선 추가에 대한 요구가 많아지면서, GTX 기존선 연장 및 신규노선 발굴(D, E, F)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경기남부 광역철도 소외지역 광역교통시설 확충과 관련하여 양주시 덕정역에서 수원시 수원역까지 구상된 GTX-C 노선을 천안·아산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GTX-C 노선은 민자철도사업으로 추진되었으며, '21년 6월에 (주)현대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되어 사업에 대한 협상이 진행 중이다. 사업자는 덕정역~수원역에 기반을 둔 사업구상을 하였기에, GTX-C 노선을 천안·아산까지 연장하는 경우 사업자의 구상안 변경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업자 관점에서 연장에 따라 사업 수익성이 악화되는 경우 사업 추진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GTX-C 연장 추진을 위해서 정부, 지자체, 민간사업자가 협력을 통하여 사업 추진을 위한 지혜를 모으는 게 매우 중요할 것이다.

### 내포태안철도

내포태안철도는 충남권 태안~서산~예산 3개 지자체를 경유하는 노선으로 57.6km의 단선전철이다. 충남 서해권은 중국 동부지역과 수도권이 교차하는 환황해권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국가 공간 및 경제구조 측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입지하고 있다. 내포태안철도는 장항선 및 서해안 복선전철과 연계를 통하여 충남 서해권이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강원권, 동남권까지 공간 구조 및 지역경제권 확장이 가능하다. 내포태안철도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추가검토사업에 반영되어져 있어, 국가적으로 사업의 미래가치는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철도노선 통과지역의 사회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경제성 타당성 확보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업 추진을 위해서 경제성 타당성 확보 이외에 지역균형발전 및 교통서비스 낙후지역의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필요성이 보다 더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서산시와 태안군의 경우 다수의 관광지와 장래 관광개발계획으로 인해 지속적인 관광객 수 증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교통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지기에 이러한 측면에서 필요성이 강조되어야 한다. 철도교통 소외지역에 고품질 철도교통 편의 제공, 지역균형발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부각되어야 한다.

### 충청 내륙철도

충청 내륙철도는 충남 홍성~청양~공주(KTX)~계룡을 연결하는 78.6km의 단선철도이다. 기존 호남선과 경부선과 연계하여 충남혁신도시, 대전시 및 경상권과의 경제권역을 확대할 수 있다. 또한 서해선, 장항선 등 철도와의 연계를 통하여 수도권 접근성 강화 및 KTX 공주역의 이용수요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구상 중인 내포태안철도가 건설된다면, 충남 서해권 경제권역 확대를 통해 지역 간 연계성 강화 및 경제, 사회, 관광, 레저 등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사업은 아직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이 되어있지 않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사업 경제성 이외에 본 사업의 국가적 사회적 가치 발굴도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국내 철도망은 남북축 위주로 발달되어 동서 간 연결성이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동서횡단철도 건설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다. 경강선 개통, 춘천~속초 동서고속철도 건설 확정, 경전선 고속화 사업 추진 등으로 동서축 고속철도서비스 보급이 확대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남한의 중심 허리 축에 대한 철도망 계획이 미진하여 완전한 철도연계체계 구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부·호남 축을 제외한 내륙·해안지역은 낮은 대중교통 접근성으로 지역발전 기회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서산과 울진을 잇는 동서횡단 철도로서 총연장은 322.4km의 단선전철이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되어 있다. 동서 간 2시간대 고속교통망 구축으로 교통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며, 경부선, 호남선, 중앙선 등 기존철도망과 연계로 국가철도네트워크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장거리 노선, 높은 사업비, 낙후 지역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경제성이 확보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단순한 경제성 논리에 국한하기보다는 국가 동서횡단철도의 주요 축으로서 중부권 연계성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권 형성으로 지역균형발전이 강조되어야 한다. 특히, 중부권이 수도권의 규제 반사이득의 수동형 발전구조에서 지역경제권 형성을 통한 능동형 발전구조로 전환하여, 중부권이 수도권 집중 방지의 방파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 강조되어야 한다.

### 아산만 씨클형 순환철도

아산만 씨클형 순환철도는 천안~아산~평택을 기존 경부선, 장항선, 서해선, 평택선을 활용하여 하나의 순환철도로 묶는 것으로 총 연장은 103.7km이다. 충남북부지역과 수도권 남부지역을 연결하여 지역 간의 경제활동 영역 확장을 통한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서해선과 장항선 단절구간 연결사업과 비전철로 운행되는 평택선에 대한 전철화 사업이 고려되어야 한다. 서해선(합덕역)과 장항선(신례원역) 연결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될 경우 사업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만, 중부권동서횡단철도 사업 추진이 확정되지 않았기에, 사업추진 방식은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 할 수 있다. 평택선을 활용한 순환철도는 전철화 순환철도의 단절구간이기에 전철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전체 순환철도가 비전철로 운행되어야 할 것이다. 순환철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평택선 비전철 구간의 전철화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순환철도의 운영 효율성을 위하여 구간별 이용수요에 따른 탄력적 열차 운영계획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주요 구간을 운행하는 셔틀열차와 연계한 승을 통하여 철도이용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 충청산업문화철도

충청산업문화철도는 조치원과 보령을 연결하는 82.1km의 단선전철이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추가검토사업으로 반영되어 있다. 주요 경유지역은 조치원, 세종, 공주, 청양, 부여, 보령으로, 서측으로 장항선과 서해선축과 연결되고, 동측으로 경부선 및 충북선과 직결이 가능한 노선으로 충청지역을 관통하는 간선철도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충남지역 동서 간 철도망 부재에 따른 철도서비스 낙후지역 개선을 통하여 부여, 공주 등 백제 문화재 연결을 통한 지역 관광 벨트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국가적 사회적 가치 발굴은 매우 중요할 것이다. 즉, 철도교통 소외지역에 대한 철도서비스 제공과 충남지역과 세종시 행정복합도시와 연계성 강화를 통한 지역발전 효과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과거 철도는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이끌었던 주요 교통시설이었으나, 1980년대 마이카 시대와 함께 철도 투자 축소, 철도 서비스 질적 저하, 철도 이용객 감소 등으로 이어지면서 철도의 쇠퇴기를 겪게 되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2004년 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철도는 다시 부흥할 수 있게 되었고,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하여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자리를 하고 있다. 철도 공급 확대는 인구 증대, 노동 생산성 향상, 고용효과 확대, 지역총생산 증대 등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철도역사는 지역 경제의 성장거점으로서 지역 간 연계와 인적물적 교류의 중심지로 역할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철도의 역할은 산업 집적을 위한 역세권 거점 확보, 지역 클러스터 내 산업 확대를 위한 대량 수송시설, 주요 거점 간 연계 기능을 위한 고속 수송이라 할 수 있다.

철도사업 추진에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철도사업의 최종 목표는 철도건설이 아니라 효율적인 철도운영을 통하여 철도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교통이동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더 나은 교통서비스 제공으로 철도이용자 수요 증가, 운영사 수익 증가로 이어지고, 이는 더 나은 철도서비스 투자를 이끌 수 있는 철도사업의 선순환 구조체계를 완성할 수 있다. 철도사업을 계획하는 단계에서 철도운영이 고려되지 않을 경우 철도는 이용하기 불편한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외면하게 될 것이다. 철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철도 경유 지역에서 철도를 통한 어떠한 지역 발전을 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이러한 고민을 기반으로 정부와 지자체는 철도운영을 고려한 건설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의  
전국적 의의

홍원표 |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민선도정 8기에 들어서면서 ‘베이밸리’가 주목받고 있다. 경기도 남부지역과 충남 북부지역을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 지역을 경기도와 충남의 상생 지역으로 협력하여 개발하자는 것으로 김태흠 지사의 선거공약이기도 하고 도지사 제1호 결재사항이기도 하다. 아산만 일대는 우리나라에서 제조업이 가장 집적된 지역이다.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자동차산업 등 전기·전자 분야에서 세계적인 생산집적지다. 이 지역이 앞으로 어떤 지역으로 발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단지 경기도나 충남도 차원이 아니라 환황해권 내지 세계적 차원의 사안이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베이밸리’를 중심으로 아산만 지역의 현황을 짚어보고 이 일대의 발전 방향을 모색한다. 특히 베이밸리가 국가적으로 어떠한 의의가 있는가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실마리를 이끌어내는 데 집중하고자 한다.

베이밸리는  
어떤  
지역인가?

충남도의 설명에 따르면, 베이밸리는 화성, 오산, 평택, 안성 등 경기도의 남부지역과 천안, 아산, 당진, 서산 등 충남의 북부지역을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가리킨다. 총인구는 320만 명으로 전국의 6.2%를 차지하며, 경기 남부 187만 명, 충남 북부 133만 명이다. 경제활동인구는 185만 명으로 전국의 6.7%이며, 경기 남부 106만 명, 충남북부 78만 명이다.

지형상 광주산맥과 차령산맥이 동쪽에서 뻗어와 차츰 낮아지는 모습으로 서쪽은 경기, 평택평야, 예당평야가 넓게 발달해 있고, 수계는 안성천, 삽교천, 곡교천이 아산만으로 모여들어 서해로 흐르고 있다. 생태적으로는 안성천, 삽교천, 곡교천 등 하천과 서해 연안으로 이루어진 하천·연안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 권역 내에 자체로 개발·공급할 수 있는 용수원이 부족하여 외부 지역으로부터 할당되는 광역상수도에 의존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지정학 측면에서 보면 아산만은 대륙과 해양의 교차지대다. 역사적으로 성리학, 기독교의 도래지가 이곳이다. 가깝게는 청일전쟁 시기 풍도 해전, 성환 전투 등 주요 교전 지역이 이곳이었다.



1990년대 이후 중국의 개혁개방과 경제성장에 힘입어 가장 높은 성장을 구가하는 곳은 바로 이 곳이다. 한편 국내 차원에서 아산만 일대는 경부 축과 서해안 축이 만나는 곳이다. 부산, 대구, 대전을 거쳐 따라오는 경부 축과 목포, 광주, 새만금을 거쳐 충남 서해안을 따라오는 서해안 축이 합류하는 곳이 바로 이 일대다.

이렇게 다양한 흐름이 만나는 곳에서는 새로운 흐름이 창출되는 곳이기도 하다. 조선 세종 시기 과학기술의 융성을 이끌었던 장영실, 이순지의 탄생지가 아산과 안성이었고, 저명한 실학자인 홍대용은 천안 출신이고 추사체로 유명한 김정희는 예산 출신이다. 아산만 일대는 상이한 흐름이 만나고 새로운 흐름이 만들어지는 지역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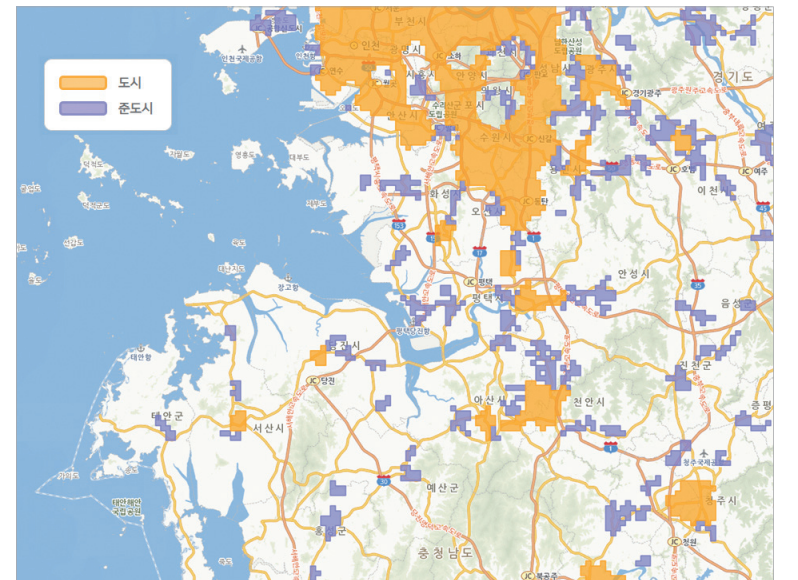
산업 측면에서 보면, 이 일대는 서울·경기권의 일부다. 서울·경기권은 상하이·난징·항저우 장강 삼각주, 베이징·톈진, 도쿄·요코하마 등과 어깨를 겨루는 세계적 산업집적지다.

그런데 아산만 일대를 따로 떼어놓고 보면, 사뭇 그림이 다르다. 이 지역은 대기업 공장을 중심으로 협력업체 공장들이 밀집한 공장지대다. 기업의 본사, 연구개발센터 등은 서울 등 수도권 대도시에 있고 그 생산시설이 이 지역에 입지하고 있다. 또한 수출제조업이 발달해 있어서 현지와의 산업 연관보다는 글로벌 네트워크와의 연계가 더욱 밀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일대는 반도체, 자동차산업,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석유화학, 철강 등 주력산업과 신산업이 고루 섞여 있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초소재의 경우 충남 북부에 몰려 있고, 전기·전자의 경우 천안·아산, 평택을 중심으로, 자동차산업의 경우 화성, 평택, 아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주체계로 보면, 아산만권은 화성(동탄), 오산, 평택, 천안·아산 등 경부 축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해 있다. 이외 화성, 평택 서부, 당진, 서산 등은 약간의 시가지를 제외하고는 도시지역이 미비한 상황이다. 아산만권에서 시가지 규모가 가장 큰 도시는 천안시이나, 경기 남부 시·군은 대부분 수원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 도시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전반적으로 아산만권은 단일한 통근권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경기 남부는 대체로 수원, 안산 등 인근 대도시의 통근권이고 천안·아산 지역과는 구분되는 통근권이라고 볼 수 있다. 대도시 지역과 달리 정주 여건이 양호하지 않다.

| 그림 1 | 아산만권의 도시화 지도



출처 : <https://sgis.kostat.go.kr>

###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어떤 프로젝트인가?

충청남도의 발표에 의하면,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메가시티로 육성한다는 것으로, 아산만 써클형(평택~아산~천안) 순환 철도 신설, 천안(종축장 부지 등) 대규모 최첨단 국가산업단지 조성, 당진평택국제항 물류 환경 개선과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 육성, 한화해경제자유구역청 복원과 민관 상생 발전위원회 설치 등 과제를 포함한다.

다소 두루뭉술한 이러한 베이밸리 메가시티 프로젝트는 수도권 분산, 평택·당진항 배후지 개발, 도계지역 상생 개발이라는 상호 유사한 3가지 성격이 혼재한다.

**우선,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수도권의 기능적, 산업적 분산이라는 측면을 담고 있다.** 수도권 집중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수도권 집중 현상을 도외시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모색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인식하에 성장세가 강한 수도권의 복사력을 충분히 활용하여 남하(南下)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물론 수도권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베이밸리는 수도권 남부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엄격한 의미의 수도권 분산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런데도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거점을 남쪽으로 내린다는 측면에서 수도권 분산의 성격을 안고 있다. 향후에 베이밸리의 성공을 서해안 축을 따라 새만금까지 연결하자는 구상을 담고 있다. 국가계획으로 추진된 아산만권 광역개발 계획(1995~2011)이 대표적인 프로젝트다.

**둘째, 평택·당진항의 배후지 개발이라는 성격이다.** 베이밸리 메가시티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국제무역항으로 성장한 평택·당진항의 배후지에 있다. 평택·당진항은 이미 도 경계를 넘어서는 광역항만이기 때문에 이러한 논리가 자연스럽다. 2021년 기준 평택·당진항은 물동량 기준으로 1억 1천 6백만 톤이며, 전국 5위의 항만이다. 여기에 전국 6위인 대산항의 8천 7백만 톤을 합하면 4위 인천항 1억 5천 8백만 톤보다 많다. 최근에는 포승인입철도(포승~평택단선철도), 석문산단 인입철도(석문산단~합덕), 천안~당진 고속도로 등 평택·당진항의 접근성이 부단히 개선되면서 배후 지역과의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다. 경기도와 충남도가 공동으로 설치한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대표 사례다.

**셋째, 도계지역의 상생 개발이라는 성격이다.** 경계 지역은 각 행정구역의 변방에 속하기 때문에 개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기 쉬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교통 인프라 등 접근성이 떨어지고 또한 정주 여건이 양호하지 못한 경우가 많다. 도계지역의 상생 발전은 대개 두 행정구역을 연결하는 교통인프라 건설이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경우가 많다. 또는 공동 수계의 보전과 관리 등이 핵심 사안으로 등장한다. 대표적으로는 2016년부터 경기도와 강원도가 접경지역의 개발을 목표로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도로 인프라 등을 함께 개발하는 사례가 있었다.

표 1 | 베이밸리 메가시티의 다양한 성격

성격	수도권 분산	평택·당진항 배후지 개발	도계지역의 공동개발
목표	수도권 기능 분산	대외 수출전진기지	도계지역의 개발
수단	정부 광역개발계획	투자유치, 재정사업 및 지원	양 시도의 공동투자
내용	신규 산업 입지, 항만 기능 이전	배후 산업단지 개발	교통 인프라 개선
사례	아산만권 광역개발 계획 (1995~2011)	황해경제자유구역 (2008~2014)	경기-강원 상생발전 협약 (2016~현재)

현재 논의되고 있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프로젝트는 이 세 가지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 이 중에서 세 가지 성격은 상호 보완성이 있기도 하지만 지향하는 결은 상당히 다르다. 따라서 관련 논의와 계획이 구체화함에 따라 프로젝트의 성격은 더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관련  
기회와 위협

우선, 베이밸리 메가시티를 둘러싼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에너지 전환, 다극화 전환 등 거대한 전환은 향후 20~30년에 걸쳐 중장기적으로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는 기회이자 위협인데, 베이밸리 메가시티도 예외가 아니다.

**우선 4차산업혁명이 뒷받침하는 디지털 전환에서 아산만은 기존의 산업적 우위를 지키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제품(기술)은 반도체, 이차전지, 센서 등으로 요약된다. 아산만은 반도체를 비롯한 미래 신기술(제품) 생산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것은 이 지역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에너지 전환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었다. 에너지 전환은 탄소세 도입 등 이제 기업의 생존에 영향을 주는 수준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기초소재산업인 제철산업(당진), 석유화학산업(서산)은 에너지 절약 기술(제품) 개발이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반면 여기서 우리는 아산만권에서 정화산업(purification industry)의 성장 가능성을 본다. 미세먼지 여과, 탄소포집 및 활용(Carbon Capture, Utilization and Saving), 해수 담수화, 해양쓰레기(미세플라스틱), 토양오염 복원 등이 있다. 환경 문제를 기업의 부담이 아니라 새로운 먹거리라는 발상이 현실화할 기회가 왔고 아산만권은 이러한 정화산업 성장의 최적지다.

한편 다극화 전환은 글로벌 가치사슬의 재편을 불러오고 있다. 중국, 미국 등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교역지역을 다변화하여야 하는 처지다. 아산만권은 중국의 경제성장에 힘입어 성장을 이룩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미·중 무역 갈등 및 경제 블록화 경향은 아산만의 지속 성장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프렌드 쇼어링(friend shoring)’, ‘칩4동맹’과 같은 단어가 웅변하듯이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첨단산업의 일각을 당당히 차지하는 나라로서 글로벌 가치사슬 재편에 따라 신성장산업의 집적지로 주목받을 수 있다.

**둘째, 국내적으로는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의 당위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구축 및 확산이 필요하다.** 2010년대부터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 기조는 제도적으로 지역분권을 강화하면서도 경제활동의 수도권 집중은 용인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최근에 ‘지역소멸론’이 전면적으로 등장하며 지역 균형발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높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이 수도권 남단의 도시화를 통해 수도권의 팽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는 설득력이 있다.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은 이러한 우려에 대해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

우리는 아산만권이 경부 축과 서해안 축이 합류하는 지점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아산만권의 발전이 단순히 이 일대의 성장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경북 축과 서해안 축을 타고 전국적으로 확산해야 한다. 이는 결코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가 아니고 전 국토 차원의 고려와 정책이 함께

따라야만 가능하다. 더불어 서산과 울진을 연결하는 중부동서횡단철도 또한 평택당진항과 동해안을 연결하여 아산만권의 복사력을 동서로 확산할 수 있는 또 다른 축이다.

**마지막으로, 지방정부 간 상생 발전을 뒷받침할 거버넌스 모델이 구축이다.** 사실 아산만권을 둘러싼 경기도와 충남도의 상생 노력은 부단히 이어져 왔다. 그러나 성공적인 사례는 드물었다. 국가계획이었던 아산만권 광역개발 계획이나 서해안권 발전종합 계획을 제외하고는 황해경제자유구역 해제, 평택·당진항 도계분쟁 등 부정적인 경험이 적지 않다. 이번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은 지역 차원의 상생발전의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내고 타 지역으로 확산하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



## 충남 해양레저관광 정책 방향과 과제

홍장원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연구위원

### 해양레저관광 정책 방향의 정립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사업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되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서 관광 부문은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이라는 표제 아래, 관광시장의 재도약과 경쟁력 강화, 지역특화, 인재 양성, 웰니스 관광 활성화 등의 세부 과제들이 포함되어 있다. 해양레저관광과 관련된 과제로는 해양 신산업 육성 분야에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마리나 거점 및 레저 선박 클러스터 조성 등이 언급되고 있다. 한편 중앙 정부 차원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국정과제와 발을 맞춰 충청남도는 연안 도시를 ‘국제 해양레저 관광벨트’로 조성한다는 민선 8기 도정 전략과 함께 글로벌 해양레저 관광도시 조성, 서해안 마리나 산업 육성, 해양 치유센터 건립 등을 정책과제로 천명하고 있다.

해양산업에서 ‘해양관광’ 또는 ‘해양레저’ 부문의 정책은 수산업이나 해운·항만산업 등 전통적 해양산업과 달리 주로 신산업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데, 이는 해양레저관광산업이 과거 어업을 중심으로 성장했던 연안 지역의 새로운 경제 활성화 수단으로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 정책 및 산업구조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신산업에 부합하는 새로운 소비시장 육성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해양레저관광 부문은 자연 자원에 대한 높은 의존도와 바다에 대한 물리적·심리적 거리감의 존재 등 시장 활성화를 저해하는 대내외적 장벽이 높은 특징이 있는데, 이와 같은 걸림돌을 없애고 해양레저관광을 지역발전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관광 기반 시설 조성만큼이나 바다를 즐기는 휴양문화의 확산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 충남지역 친수문화의 육성

우리나라는 국토의 삼면이 바다로 지역마다 고유하고 다채로운 해양레저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국민이 바다를 즐기는 방식이나 친수문화 측면에서는 해안 경관을 감상하거나, 해수욕장 방문, 갯벌 체험, 수산물 먹거리 관광 등 단편적이고 단조로운 모습을 보인다. 또한 지역의 해양레저관광을 새롭게 홍보하기 위한 상품도 다양하지 못하며 레저 선박이나 기구를 활용한 관광시장도 성장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는 관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는 측면 외에도 자연 및 기상 여건으로 인해 해양레저관광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계절이 여름철에 한정된다는



계절적 제약과 안전사고 발생 등 바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관광 활성화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마리나, 크루즈, 스킨스쿠버, 서핑 등 대부분의 해양레저관광 활동이 해외에서 유입되었지만, 국내에서 이들 활동을 즐기는 문화가 자생하고 성장하지 않은 것도 원인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가로막고 있는 제약요인을 해소하고자 해양레저 선도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연안 지역에 마리나, 크루즈 터미널, 다이빙 센터, 서핑 체험시설 등을 조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 거점, 국제 관광도시 구축 등을 표방하고 있지만 가시적 성과를 얻고 있지는 못하다. 이는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적지 선정 및 개발사업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 외에도 바다를 즐기는 문화가 형성된 배경과 환경적 여건이 상이한 해외 개발사례를 국내에 동일하게 적용하면서 지속적인 수요를 창출하지 못한다 원인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친수 문화 확산에 기반한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별로 해양레저·스포츠 대회 및 축제, 이벤트 등을 개최하고 있지만, 대부분 일회성 행사로 종료되거나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홍보와 체험 기회가 극히 적기 때문에 같은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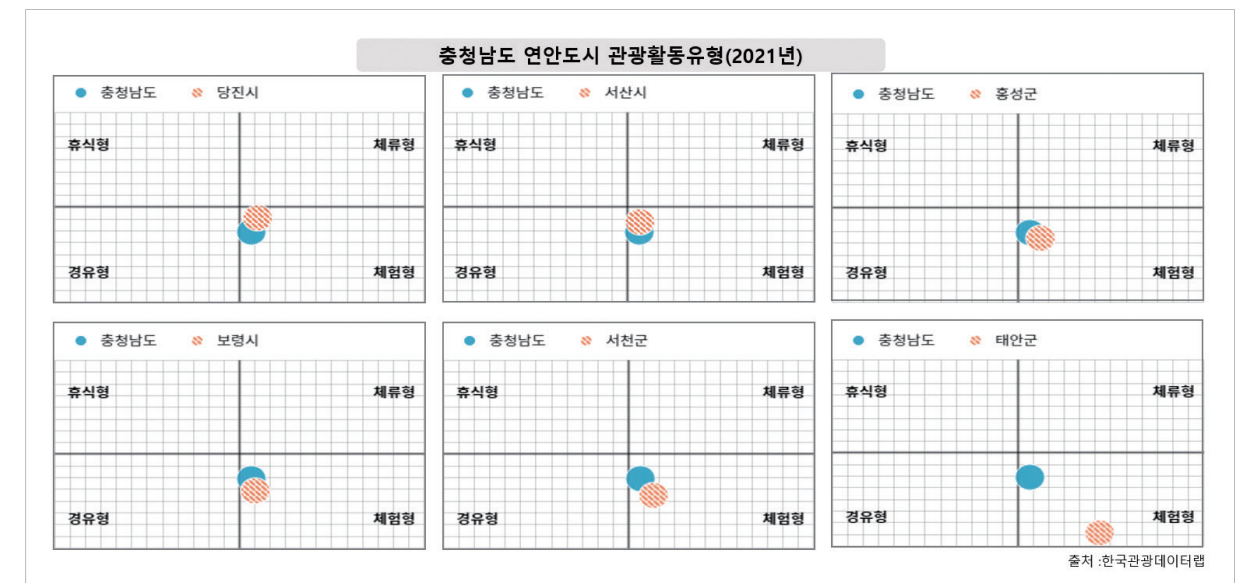
이러한 측면에서 충청남도가 정책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서해안 마리나 산업 육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마리나항만 조성과 레저 선박 건조·수리·서비스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 앞서 레저 선박을 통해 해양레저를 즐기는 인구를 늘리고, 해양레저관광을 일상적으로 즐길 수 있는 문화를 확산하는 등 해양레저관광의 저변을 튼튼히 하는 정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충남지역의 친수문화 육성 정책이 우선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연안 지역의 해양레저 활동 동호회, 지역 주민, 특히 청소년층을 중심으로 해양 친수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체험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지역특화 해양레저관광 상품의 발굴

충청남도는 해수욕장과 갯벌, 도서 자원을 기반으로 해양레저관광 시장을 형성해 왔으며, 거점형 마리나항만과 해양 치유센터, 해양정원 등 관광 활동을 위한 공간조성사업과 갯벌 체험, 머드 축제 등 홍보사업을 통해 관광시장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관광시장은 개방성이 높은 자연 친화적 관광지에 대한 선호가 증가했으며, 단독 또는 소규모로 자연 속에서 체험형 관광 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나는 트렌드를 보인다. 또한 여행의 일상화와 함께 혼잡한 지역을 회피하고 안전한 여행지를 선택하는 경향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탁 트인 해양공간에서 소그룹으로 즐길 수 있는 레저 선박과 기구를 활용한 해양레저 활동과 연안 지역의 해양 치유자원을 활용해 심신의 휴식을 누릴 수 있는 해양 치유산업의 육성 등을 추진하고 있는 해양레저관광 정책과 연계한다면 충남 해양레저관광 시장에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의 해양레저관광자원을 관광 트렌드 변화와 연결하여 새로운 관광상품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다만 개별 지역 차원에서 관광 트렌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사업을 발굴하는 것은 다소 취약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지역마다 유사한 관광시설을 조성하거나 자연 자원에 의존한 체험상품 운영으로 지역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되고 접근성과 시설 노후 정도에 따라 관광상품의 성패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한 개발사업 추진과 중앙정부 정책사업 선점 형태의 관광사업 발굴로 나타난 결과이다.

충청남도 해양레저관광 시장을 ‘한국관광 데이터랩’의 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연안 도시들은 체류형 관광 활동 유형 내에서도 지역별로 각각 다른 특징을 보인다.



이와 같은 결과는 배후 관광시장인 수도권, 대전권 등과의 거리, 해안선 길이와 규모, 지역 내 교통 접근성과 연계 관광자원 분포에서 비롯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갯벌 자원을 활용한 갯벌 체험상품 운영이나 레저 선박 정박을 위한 마리나항만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다양한 개발 유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모든 지역이 같은 형태의 거점형 마리나항만을 개발하거나 해양 치유센터, 갯벌 체험시설을 조성하는 것에서 벗어나 지역의 소비시장을 고려한 정책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 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이라는 충청남도의 장기적·거시적 전략 틀 속에서 지역의 관광자원과 관광행태,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한 주기적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지역특화형 해양레저관광상품을 개발해야 한다. 최근 충청남도는 태안과 보령을 연결하는 접근체계의 구축을 통해 연안 지역 간 접근성이 크게 강화되었지만, 지역 내에서는 관광수요의 유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역 간 경쟁적 관광 테마의 발굴 및 유사 관광 기반 시설의 중복개발에서 벗어나 지역의 특색을 살린 다양한 체류, 휴양, 체험상품의 발굴을 통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전략을 마련하고 연안 지역 간 거점과 연계 거점 설정을 토대로 지역 관광자원의 특성에 따라 개발 규모와 유형을 구분하는 정책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지역의 관광정책과 관광시장을 이야기할 때 관광과 해양레저관광을 이분법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은 관광 공간과 해양레저관광 공간을 분리하여 관광 활동을 즐기지는 않는다. 그러나 정책을 집행할 때는 관광정책과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구분하거나 각각 다른 방향의 정책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지역발전정책은 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지역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안 지역에서 ‘관광’과 ‘해양레저관광’ 정책은 상호 구분된 배타적 관계가 아니라, 무엇을 중요한 성장 가치로 선택할 것인가에 달려있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해양레저관광 시장 육성정책도 연안 지역의 성장 수단으로 해양레저관광을 선택할 경우 ‘해양레저관광’을 중심으로 지역 내 정책과 시설을 연계하는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정책집행 부서에서도 정책사업을 융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수립할 때 ‘미래형’, ‘복합공간’, ‘거점도시’ 등의 표현은 지역의 비전이나 청사진을 제시하는 표현으로 꾸준히 언급되며 정책사업에도 빈번히 등장한다. 반면 ‘해양레저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나 ‘청소년 바다 학교’ 등은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발전전략으로 제시되거나 거시적 정책사업을 표현하기에는 빈약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그간 지역 해양레저관광 정책을 뒤돌아보면 거대한 청사진은 구상으로 머무는 경우가 많았으며, 관광 수요는 지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 해양레저 관광벨트’ 조성이라는 지역의 청사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관광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투자와 동시에 지역을 중심으로 해양레저문화를 즐기는 수요자를 발굴하는 사업도 균형 있게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충청남도 민선 8기 해양레저관광 정책은 해양레저관광 시장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트렌드 파악을 바탕으로 지역 친수문화 육성과 모든 세대가 즐길 수 있는 해양레저관광 공간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본다.

## 탄소중립 경제, 위기인가 기회인가

강석태 | 카이스트 교수

탄소 경제로 정의할 수 있는 과거의 화석연료 기반 경제활동으로 인해 배출된 지구온난화가스(GHG: green-house gas)로 인한 기후변화의 피해는 해마다 반복되고 경제 피해 규모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와 관련된 위기를 극복하고자, 전 세계적인 합의가 1997년 교토에서 열린 3차 당사국총회(COP3: conference of parties)에서 이뤄진 이후, 2015년 파리에서 열린 COP21에서는 지구의 평균 온도가 산업화 이전에 비해 2도 이상 상승하지 않게 하려고 모든 국가가 이산화탄소 순 배출량 0을 목표로 하여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자는, 종료 시점이 없고 강제성이 있는 국제협약으로 발전되었다. 이에 따라 Net zero로 대변되는 탄소중립은 작게는 국가 경제발전을 좌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키워드임과 동시에, 크게는 미래 인류의 번영을 담보할 수 있는 핵심적인 실천 사항으로 떠올랐다.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산업구조 및 생산/소비 방식, 경제 및 생활방식은 탄소를 적게 배출하거나, 아예 배출하지 않는 사회로의 전환이 진행될 것이지만, 이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탄소중립의 이행 여부에 근거한 새로운 방식의 경제활동 및 무역 제재에 대한 국제적 논거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유럽,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같은 주요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이면에는 EU의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이나<sup>1)</sup> 미국의 공정한 전환 및 경쟁법(FTCA: 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sup>2)</sup> 등과 같이, 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는 수입품에 대하여 그 차이만큼 탄소국경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라 선진국은 교역대상국에 비해 비교우위인 탄소중립 기술을 이용하여 자국 생산품의 가격경쟁우위 유지와 신산업 및 기존산업의 육성을 시도하여 새로운 고용 창출을 달성할 수 있게 된다.<sup>3)</sup> 일례로, 현재는 화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저가의 중국제 배터리가 EU에서

1) 법률신문, EU 의회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 법률안』 확정 및 전망, 2022.07.28.

2) 정훈, 여영준, 조해인, 탄소 국경조정 대응 산업지원 정책과제와 정책효과 예측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연구보고서 21-05.

3) 박혜리, 박지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 방안 연구,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자료 21-06.

## 탄소중립 경제

생산되는 전기차에 장착되나, 향후 탄소세나 탄소국경세가 부과되면 EU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된 배터리가 오히려 중국산 배터리에 비해 가격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sup>4)</sup>

본 고에서는 이미 시작된 탄소중립 경제로 인한 국내 산업의 위기를 진단하고, 미래 산업구조에서 새로운 탄소중립 경제체계에 조기 정착을 위한 기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탄소중립 경제는 재화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인간의 행위에 있어 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이 담보된 탄소중립 관점을 최우선에 두는 경제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산업, 금융, 기술, 환경, 인프라 등 사회구조와 함께 각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효율성과 가격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재의 탄소 경제와 대비된다. 전 세계 주요국들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기술 개발 및 자본 투자를 진행하고 있으며, 탄소중립을 위한 전 세계 기후경제투자 규모는 이미 2020년 6,320억 달러에 이르고,<sup>5)</sup> 주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 개선, 지속가능한 수송 분야 인프라 구축에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sup>6)</sup> 2021년 글래스고에서 열린 COP26 이후 NDC 이행에 따른 공적 투자변화의 일례로, 미국을 비롯한 23개국과, 아시아개발은행, 유럽투자은행 등 금융기관들은 2022년까지 탄소 저감장치가 없는 화석연료 에너지 부문에 대한 공적 지원을 중단하고, 기존 화석연료 부분으로 투자되던 연간 178억 달러의 공적 재원을 청정에너지 분야 투자로 전환하였다.<sup>7)</sup>

따라서 각국의 화석연료에 기반한 에너지 관련 산업은 물론, 화석연료를 수출하는 국가는 미래 경제시장에서 생존이 불가능하다. 이러한 현상은 점차 인간의 라이프스타일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제품 사용, 자전거와 같은 무탄소 교통, 식물에 기반한 대체육 소비 등은 이미 거대한 시장으로 성장하였다. 지구 재생 프로젝트라 칭할 수 있는 탄소중립과 관련된 정부의 탄소중립 경제 내 분류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겠으나, COP26에서 논의된 사항 및 선진국에서의 기술 투자 방향을 참고하여 [그림 1]과 같이 정리하였다.

4) Hall D. and Lutsey, N., Effects of battery manufacturing on electric vehicle life-cycle greenhouse gas emissions, 2018, www.theicct.org

5) 송홍선,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자본시장의 변화와 발전과제, 자본시장포커스, 2022-02.

6) <http://unfccc.net>

7) 문진영, 이성희, 2021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논의 및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Vol. 21, No. 21, 2021.

## 탄소중립에 대한 국내/외 대응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각국 정부가 주요 부문별 감축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제시된 감축량은 단순한 규제 중심의 환경정책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이다. 모든 감축안의 핵심은 기술의 발전이 필수 조건이므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통한 기술개발과, 민간의 자발적 감축 노력과 지속가능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

미국의 경우 바이든 행정부에서 계획하고 있는 지속 가능 인프라 및 청정에너지 관련 2조 달러 규모의 투자계획 내에서 기후고등연구계획국(ARPA-C,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climate)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저렴하고 획기적인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범정부적 노력을 조율하고 강화할 예정이며, 기후혁신 실무그룹을 통해 10년 동안 350억 달러를 투자하여 탄소중립 건물, 1/10 비용의 에너지저장시스템, 최첨단 에너지시스템 관리기술, 저비용/저탄소 차량 및 교통 시스템, 저탄소 항공기 및 선박 연료, 온실가스 효과 없는 냉매, 공조, 히트펌프, 철강, 콘크리트, 화학 공정 저탄소와, Net-zero 수소, 이산화탄소 토양 저장 기술, 이산화탄소 직접 포집 기술(DAC) 등의 중점 기술을 개발할 예정이다.<sup>8)</sup> 일본의 경우에도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2조 엔을 조성하여 차세대 재생가능에너지, 탄소중립 에너지, 자원순환 사회 구현 등에 향후 10년간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sup>9)</sup> 유럽은 그린딜 투자계획 (EGDIP: European green deal

그림 1 | 탄소중립 경제를 위한 정부 역할의 유형적 분류 및 핵심 구성요소



8) 주요국의 탄소중립을 위한 산업정책 현황과 시사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글로벌 이슈 특집 2, 2021.8.

9) 이성규 외, 세계 주요국 탄소중립 전략과 중국의 저탄소 전략의 비교분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중국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21-84-09, 2021.12.30.



investment plan)에 따라 향후 10년간 최소 1조 유로의 투자금을 조성하여 기후 및 환경 관련 사업에의 투자 및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프로그램으로 활용하고, 산업구조재편과 인력 재교육을 포함하는 공전전환체계(JTM: Just transition mechanism) 확립에 사용할 예정이다.<sup>10)</sup>

우리나라는 COP26에서 2050년 탄소중립과 2030년 국가감축목표(NDC) 40% 감축을 선언했고, 이를 위해 2개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제시하였다.<sup>11)</sup> 시나리오 A는 2050년까지 화력발전을 전면 중단하여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안이며, 시나리오 B는 화력발전이 일부 잔존하는 대신 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등 기술적 감축수단을 적극 활용하는 안이다. 두 안 모두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을 대폭 상향하여 시멘트·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기초소재를 생산하는 산업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와 원료를 화석연료에서 수소, 바이오, 폐플라스틱 등의 순환자원으로 대체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sup>12)</sup> 특히 주목해야 할 사항은 전력 생산을 위한 발전에서 원자력의 비중이 2030년 약 24%로 줄어드는 감축안을 제시하였으나, 2022년 신정부에서는 영국, 미국, 프랑스 등의 예를 참고하여 3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 탄소중립 경제: 국내 산업의 위기인가?

우리나라가 제시한 2030년 NDC 40%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연평균 4.2%씩 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여야 하며, 이는 주요 선진국 감축목표에 비교할 때 약 2배의 속도로 빠르게 감축하는 도전적인 목표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디스플레이, 반도체 등 6개 제조업이 전체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의 79%를 차지하는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로 인해 향후 탄소국경세에 의한 가격경쟁력 상실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림 2). 더욱이 주요 감축 수단인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2021년 8.7%에 지나지 않아 OECD 평균인 31.3%를 크게 밑도는 최하위권이 며, 더욱 심각한 것은 에너지 효율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에너지 원단위 조사에서도 분석국가 중 최하위로 평가되었다.<sup>13)</sup> GDP의 30% 이상을 수출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탄소중립과 관련된 미래 산업 구조 변화와 관련된 적응 실패는 국가 경제와 기업의 생존에 치명적인 위험요인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내 수출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분야에서의 높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해 EU에 만 약 4,8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순 수출하고 있어, 탄소국경세에 따라 1톤당 30달러의 탄소세가 과세할 경우 매년 14억 달러의 추가 관세를 부담하여야 한다.<sup>14)</sup>

10) 이민아, 이구용, 주요국 탄소중립 기술 정책 동향 (II): 기후정상회의 이후 G7 국가 기술 정책 동향 분석 및 국내 정책 방향성 제언, GTC Focus, Vol. 2, No. 5,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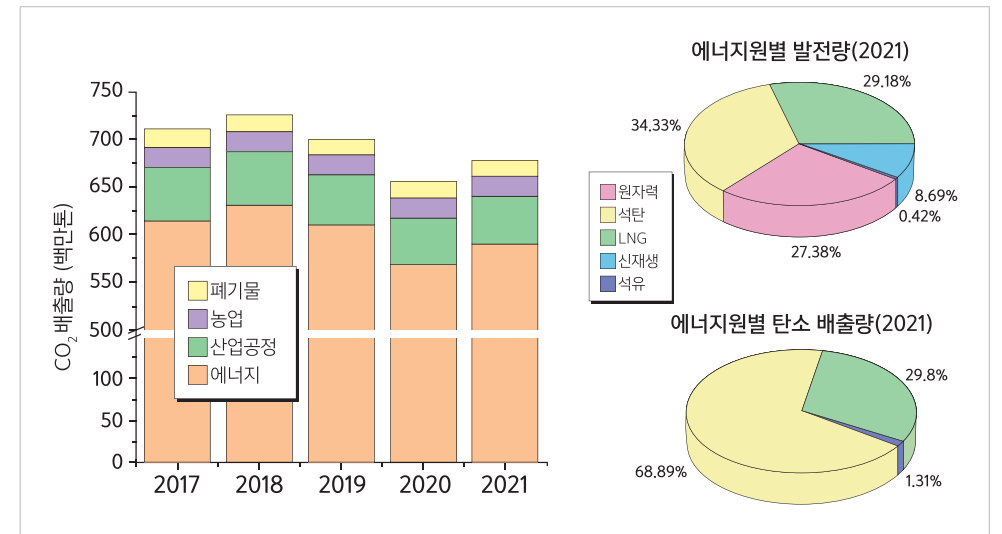
11) 문진영, 이성희, 2021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논의 및 시사점, 오늘의 세계경제, Vol. 21, No. 21, 2021.

12) 탄소중립 산업 대전환 비전과 전략, 관계부처 합동, 2021.12.10.

13) 세계 에너지 및 기후통계-2022년 연감, www.enerdata.co.kr

14) 문진영, 오수현, 박영성, 이성희, 김은미,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황과 한국의 대응 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0-21.

그림 2 | 우리나라의 부문별 이산화탄소 배출과 에너지 부문의 발전량과 이산화탄소 배출량



탄소중립 혁신을 위해 최근 투자와 기술개발 미국과 영국은 금속, 화학, 전자제품, 자동차 등에서 이미 세계 평균보다 40% 이상 감축하였다.<sup>15)</sup>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계, 특히 온실가스 고배출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비용으로 인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주장을 지속해서 제기하며 탄소 저감을 위한 노력에 소극적이었다. 다행히 저탄소 경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으로 자리 잡아, 국내에서도 ESG (environment, social, governance)로 대표되는 지속가능발전을 추구하는 기업이 늘고 있음은 고무적인 현상이다.

### 탄소중립 경제에서의 정부의 역할: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면?

현재까지의 산업은 생산 기반 및 대량생산 능력에 따른 가격-성능 경쟁이었다면, 미래 탄소중립 사회에서의 산업은 친환경성이 강조되는 혁신 기술력을 기반으로 경쟁하여야 한다. 따라서 탄소중립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기업과 국민이 저탄소 사회로 진입하도록 장기적인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합리적인 인프라 투자와 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 주도의 혁신적 기술개발과 상용 및 친환경·저탄소 설비투자를 촉진하도록 혁신연구에 대해 지원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기후자금 등의 녹색금융 활용, 친환경·저탄소 제품의 시장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및 사회적 수용성 강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2022년 3월 우리

15) 선진국 탄소 관세 도입 움직임, 세계무역 규칙 바뀔 듯, 한국무역협회, 국내외 무역뉴스, 2021.11.04.

나라는 탄소중립법을 시행하고, 탄소중립 기술혁신 전략 로드맵을 수립하였다. 또한 2조 4천억 원 규모의 기후 대응 기금을 신설하여 온실가스 감축, 신유망/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 공정한 전환 및 제도/기반 구축 등 4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고 있다.<sup>16)</sup> 탄소 경제로의 성공적인 전환을 위한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함께, 산업의 저탄소 혁신이 갖는 불확실성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켜 줄 수 있는 제도/정책 지원도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청정에너지 및 원료 공급 등을 위한 국가 차원의 탄소중립 인프라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각 과정에서 발생하게 될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고,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정보 및 기술 부족으로 인해 소외될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 및 탄소중립 과정에서 도태되는 기업의 노동자에 대한 대책으로 EU의 공정전환체계(Just Transition Mechanism) 등과 같은 제도를 통해 산업구조 재편과 인력 재교육 등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친환경 예산 및 미래 통상규범의 기본으로 자리 잡게 될 탄소세, 탄소국경세 산정 및 부과, 민간 의 저탄소 기술 혁신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등은 민간 부분의 투자를 끌어내 새로운 저탄소 기술 혁신과 경제성장을 가속하는 선순환 동력이 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기술우위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초격차를 확보할 수 있는 목적 지향적인 저탄소 기술을 발굴하여 신산업으로 육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현재 설계한 탄소중립 생태계에서 지속적이고 객관적으로 기술개발의 속도 및 사회변화를 평가함으로써, 미래 환경에 맞는 기술개발 방향 및 정책으로 능동적인 대처를 하여야 한다. 향후 탄소중립과 관련된 경제, 기술적 무역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전반을 아우르는 관점에서 국제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실제적인 정책, 사업, 기술의 교류를 수반하는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전문인력이 필수적이다. 특히 기후협약이 기후변화 논의에 특화된 협의체뿐 아니라 보다 포괄적인 다자협의 체계에서 지속해서 논의되고 있는 현실에서, 국제적인 감각과 미래의 탄소중립 경제를 이해하여 우리나라에 불리하지 않은 국제협약을 끌어내고, 기술 및 정책의 성공사례를 학습하여 국내에 적용하며, 결과적으로 탄소중립 활동을 계량화하여 배출권으로 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양성은 산업의 전환만큼이나 중요하다고 하겠다.

현대사회가 추구하는 편리함과 효율성보다 탄소중립의 가치를 우선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산업에서는 탄소세를 중심으로 저탄소, 친환경 제품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국가 구성원이 저탄소 생활을 습관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과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 및 법 개정은 물론 지속적인 교육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자연의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농·수·축·임산업의 기술개발과 연계된 국토환경 개선에서도 정부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 결언

2015년 COP21을 통해 기후변화를 위한 전 지구적인 합의에 이른 후, 탄소중립에 대한 필요성에 비해 현실적 불확실성은 오히려 증대되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어, 탄소중립 과정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산업과 경제적인 충격을 고려하여 위험회피적 대응을 하는 것은 오히려 미래 선도 기회를 포기하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제시한 NDC 2030 및 2050 Net zero 시나리오에 대해 상반된 입장의 환경단체와 기업체 모두 목표만 있고 실제 실행방안이 현실성이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sup>16) 17)</sup>

이러한 지적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탄소중립을 선언한 모든 국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오히려 연구 개발 비용과 서비스 지원, 탄소중립과 관련된 설비 투자, 국가 전략 기술 등 정부 차원의 주도적인 지원정책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따라서 탄소중립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철저한 기술 중심의 객관성과 함께, 정치적 요인에 좌우되지 않는 독립성을 유지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에 따라 수립된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16) 이영경, 탄소중립 시나리오, 무엇이 문제인가 - 산업/전환 부분을 중심으로, 에너지 정의 행동, 2021.08.

17) 김지희,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에 대한 비판과 제언, 현안과 정책 378호, 2021.10.05.

민선 8기 핵심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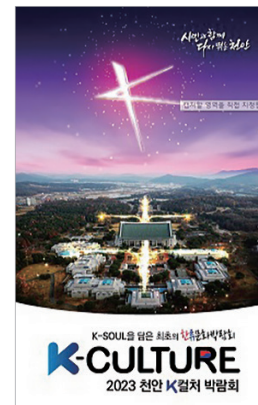
○ ● ○

천안시	금산군
공주시	부여군
보령시	서천군
아산시	청양군
서산시	홍성군
논산시	예산군
계룡시	태안군
당진시	

## 충청남도 천안시

| 천안시 정책기획과

다시 한번 천안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천안’ 슬로건을 내걸고 힘찬 발걸음 시작



### 민선 8기 5대 시정 목표 10대 추진전략 마련

천안시는 민선 8기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천안’ 슬로건을 내걸고 5대 시정 목표와 10대 추진 전략을 수립했다. 5대 시정 목표를 ▲고품격 문화도시 ▲활기찬 경제도시 ▲편리한 교통 도시 ▲친환경 그린도시 ▲행복한 복지 도시로 설정하고, 10대 추진전략을 통해 목표별 중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스마트 교통,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첨단산업 중심도시 기반 위에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 등 인프라 확충으로 강소도시 경쟁력 제고

5대 시정 목표 중 첫 번째인 ‘고품격 문화도시’ 실현을 위해 ▲독립기념관 문화엑스포 정례 회를 추진하고 2026년 목표로 ‘천안 K-컬처 세계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천안을 신한류 거점도시로 조성한다. 또한 ▲마라톤 영웅 이봉주 선수가 설계한 마라톤 코스 조성 ▲동·남부 스포츠센터 건립 등으로 시민 건강을 책임지는 일상 속 체육 인프라를 확충한다.

두 번째는 ‘활기찬 경제도시’로 지역 최대 현안인 ▲성환 종축장 이전 부지 첨단국가산업 단지 조성 ▲13개 산업단지 동시 조성 등으로 지속가능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빵의 도시 천안’ 인프라 지속 확충 ▲천안사랑카드를 확대 발행한다.

세 번째 ‘편리한 교통도시’ 구현을 위해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 ▲부성역·청수역 신설 ▲수도권 전철 독립기념관 연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대통령과 도지사 공약인 ▲GTX-C 노선 천안역 연장사업은 중앙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현실화하여 수도권을 능가하는 편리한 교통을 구축함과 동시에 ▲남부권 광역도로망 ▲천안형 외곽순환도로 건설 등으로 빠르게 통하는 도로망을 확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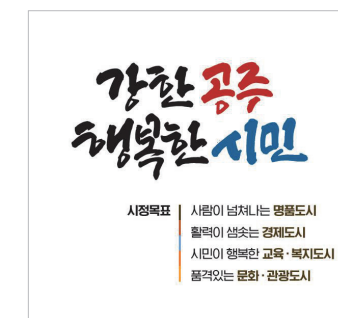
네 번째는 쉼과 여유가 있는 '친환경 그린도시'로 ▲5개 도심하천 자연 문화 르네상스 사업 ▲천안형 자연 친화 자전거 둘레길 조성 등 시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한 쾌적한 녹지공간을 확대한다. 또한 ▲천안역사 증·개축 ▲용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천안역 전 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에 박차를 가해 살기 좋은 도시 균형발전을 이룬다.

다섯 번째는 '행복한 복지 도시'로 ▲시립노인요양시설 건립 ▲장애인 365일 긴급돌봄 쉼터 개소 등으로 노인과 장애인 보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권역별 특화형 청년센터 확대 등 새로운 시대의 주역인 청년들이 도전하고 성공하는 '천안형 청년 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모두가 누리는 빈틈없는 복지를 실현한다.



## 충청남도 공주시 | 공주시 기획예산담당관

시정 비전 '강한 공주 행복한 시민'... 공주시의 위상을 재정립하려는 강한 의지 반영  
민선 8기 성과 창출을 위한 4대 시정 목표, 10대 주요 공약 제시



### 민선 8기 4대 목표 20대 전략, 5대 권역별 발전방안 마련

공주시 민선 8기 시정 비전인 '강한 공주'는 공주시의 위상을 다시 정립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행복한 시민'은 시정의 최종목표를 시민의 행복에 두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인구, 경제, 교육·복지, 문화·관광 분야별로 추진해야 할 4대 목표를 ▲사람이 넘쳐나는 명품도시 ▲활력이 샘솟는 경제도시 ▲시민이 행복한 교육·복지도시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로 설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공약을 정했다.

### 민선 8기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4대 시정 목표 10대 주요공약 추진

민선 8기의 10대 주요 공약을 4대 시정 목표별로 보면,

첫 번째, '사람이 넘쳐나는 명품도시'를 위해 ▲공주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유치 ▲주민 중심 新5도2촌 정책 추진,

두 번째, '활력이 샘솟는 경제도시'를 위해 ▲활력이 넘치는 공주경제 4개년 계획 추진 ▲지역 농산물 유통 기반 확충 ▲입주기업 친화형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

세 번째, 시민이 행복한 교육·복지도시'를 위해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한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 ▲0세~18세 실질적 무상교육 ▲학생을 위한 교통지원체계 구축,

네 번째, 품격 있는 문화·관광도시를 위해 ▲공주의 정체성을 살리는 백제문화촌 조성 ▲환경 친화적 관광자원 개발을 주요 공약으로 마련하였다.

# 충청남도 보령시

| 보령시 홍보미디어실

‘보령을 보령답게, 시민을 행복하게’... 속도감 있는 시정 운영 방향 제시  
 ‘보령의 미래 먹거리’... 보령의 100년 청사진 제시  
 시민의 일상을 챙기기 위한 10가지 시민 맞춤형 생활 공약 추진

## 민선 8기 시정 구호 / 5대 약속 / 10대 과제 / 새로운 100년

민선 8기의 시정 구호 “건강한 도시 행복한 보령”은 보령 최초 3선 시장으로서 시정의 연속성을 갖고 속도감 있게 “시민과 함께 풍요로운 보령”을 건설하여 화합과 포용의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 ▲속도감 있는 보령 발전 견인 ▲해양레저관광의 메카 조성 ▲에너지 도시로의 대전환 ▲지방소멸 위기 극복이라는 5대 약속을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10대 분야의 공약과제를 제시하였다.

10대 과제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근로자) 지원 강화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지원 ▲청년 희망 취·창업 지원 ▲명품 교육 도시 조성 ▲경쟁력 있고 살고 싶은 농산 어촌 건설 ▲편리한 도시 인프라 확충 ▲시민의 건강과 재산 보호 ▲삶이 변화하는 행복 도시 구현 ▲아이 키우기 편한 환경 조성 등이다.

이를 위한 세부 사업으로 공약사업 93개를 마련하고 그중 14개의 핵심사업을 선정해 조속한 사업 추진을 주문하였다.

특히 국가적으로 저출산·고령화에 따라 보령의 미래 먹거리 100년 청사진을 준비하기 위해 에너지 전환에 대응하는 해상풍력, LNG 냉열 활용 특화산업, 블루 수소 생산기지와 블루 체인 구축 등 미래산업을 통해 새로운 변화에 앞장설 것이다.

아울러 지역경제의 원동력인 관광산업과 관련해 원산도를 중심으로 한 오섬아일랜드 프로젝트를 통해 해양관광 케이블카, 대규모 휴양리조트 등 해양레저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코로나19 이후 관광의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하는 서해안 관광 거점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 시민의 일상을 챙기기 위한 10가지 시민 맞춤형 생활 공약

민선 8기의 임기 내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시민의 일상을 챙기기 위한 시민 맞춤형 생활 공약 10가지를 별도 선별했다.

주요 생활 공약으로는 ▲전통시장 상생 바우처 지원 ▲생활환경 저해 3대 요인 제로화 ▲도시 가스 공급 확대 ▲가전제품 수리센터 유치 운영 ▲건강하고 편안한 어르신 노후 보장 ▲24시간 맞춤형 365 어린이집 확충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오후 5시까지)/돌봄 운영(오후 8시까지) ▲청년 취·창업 및 홀로서기 지원 ▲반려동물 공원(공공 유기 동물 보호소 설치) ▲40대 이하 탈모 치료비, 중증 아토피 치료 아동 지원 등도 시민 맞춤형 생활 공약으로 내놴다.

특히, 맞벌이 부부 지원을 위해 24시간 보육이 가능한 어린이집 10개소 확충과 초등학교 방과 후 프로그램을 통한 육아 부담 완화를 위한 방과 후 교실, 돌봄 운영, 형편이 어려운 청년 취업자 생활비 및 면접 비용 지원, 청년드림 계좌 지원 등을 최우선으로 지시하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어 “보령을 보령답게 시민을 행복하게”하기 위한 새로운 보령을 만들겠다는 당찬 포부를 밝혔다.



# 충청남도 아산시

| 아산시 기획예산과

시정 비전, '참여자치로 구현하는 행복도시 아산'

- 민선 8기 아산은 시민이 시정 전반에 참여하는 「실질적 참여자치 시대」로 힘차게 도약  
「아산을 새롭게, 시민을 신나게」 “새로운 변화의 요구”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기대

민선 8기 2030 도시미래상과 9대 전략목표,

100+ 전략과제로 체계화

아산시는 최우선 사명을 「시민 모두를 행복하게 하자」로 잡고 새로운 변화의 요구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누구나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질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새롭게 도약하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아산을 위하여 2030 도시미래상으로 ▲고품격 문화·관광도시 ▲글로벌 산업경제·도시 ▲미래지향 교육·복지 도시 ▲동서남북 균형 발전 도시 ▲신바람 참여자치 도시를 설정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9대 전략목표 ▲문화예술 체육이 꽃피는 문화도시 ▲호수와 산이 어우러진 자연생태 관광도시 ▲세계로 뻗어가는 첨단산업도시 ▲농촌과 도시가 상생하는 자족 경제도시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보육 교육도시 ▲함께 나누어 그늘 없는 따뜻한 복지 도시 ▲도농이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성장 도시 ▲안전하고 편리한 스마트 도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참여자치 도시를 제시하고 있다.

민선 8기 100+ 전략과제 중 핵심사업으로 ▲신정호 아트밸리(수변 복합문화 공간) 조성 ▲트라이-포트 아산항 개발 항만 기본계획 반영 ▲시정 분야별 '참여자치위원회' 구성·운영 ▲아산 예술의 전당 건립 추진 ▲임신부터 출산까지 임신부 100원 행복택시 운영 ▲국립 경찰종합병원分院 유치 ▲스마트 도시 위한 그랜드비전 반영 「2040 아산 도시기본계획」 수립 등을 내놴다.

시정 운영 방향은 창의적사고와 혁신으로 책임과 신뢰의 행정을 만들어가고 공정이 상식이 되며 시정의 수혜를 시민이 고르게 누리는 형평의 시정 운영과, 소통과 협치의 시정철학으로 365일 열린 시장실 운영으로 시민 누구나 시정에 직접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여 시민과 늘 함께하는 것을 시정의 핵심 가치로 삼고 있다.

특히, 전략과제 중 '참여자치 위원회 구성' 정책을 민선 8기 첫 결재로 추진하면서 행정 분야별로 전문가와 활동가, 시민,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고르게 정책의 전 과정에 시민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하겠다는 당찬 의지를 표하고 있다.

아산을 새롭게  
시민을 신나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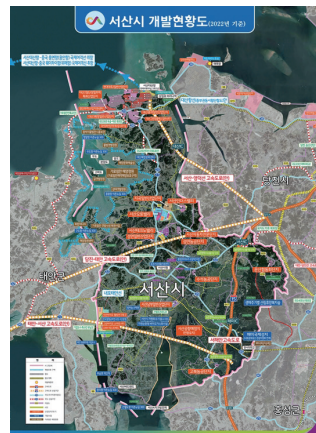




## 충청남도 서산시

| 서산시 기획예산담당관

시정 비전, ‘도약하는 서산, 살맛 나는 서산’... ‘삶의 질을 높이는 성장’ 이룰 것  
취임 100일 중점 과제 83개 추진, 민선 8기 역점사업 기반 마련 및 시정 쇄신 박차



### 민선 8기 5대 목표 15대 전략 수립

민선 8기 시정 비전으로서 ‘도약하는 서산’은 그동안 축적해온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결집하여 역동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살맛 나는 서산’은 시민의 자긍심과 삶의 만족도가 높은 도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5대 목표를 ▲풍요로운 경제 도시 ▲걱정 없는 복지 도시 ▲품격 있는 문화 도시 ▲오감 만족 관광 도시 ▲비전 있는 희망 도시로 설정하였다.

15대 전략은 ▲기업 하기 좋고 일자리 많은 기업도시 ▲살맛 나는 서해안 중심도시 구축 ▲농어민이 행복한 농어촌 ▲활력 넘치는 지역개발 사업 추진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건강·레저·의료·생활복지 대폭 확충 ▲편안한 노후생활 환경 조성 ▲문화 예술 인프라 확충 ▲문화예술 공연·전시회 유치 및 활동 지원 확대 ▲다양한 관광인프라 구축 ▲다양한 관광 콘텐츠 중점 발·육성 ▲자영업자, 소상공인, 청년 지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는 신성장산업 도시 건설 ▲인재 육성 최우선의 명품교육 환경 조성 ▲희망을 일구며 즐겁게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으로 정하고,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급변하는 정책환경 대응과 함께, 지역경제·복지·문화 등 조화롭게 발전하는 서산시의 밑그림을 제시했다.

### 민선 8기의 가시적 성과 창출과 시정 쇄신을 위한 ‘100일 중점 과제’ 추진

민선 8기의 핵심사업으로 임기 내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해 100일 동안 중점 추진할 83개 과제(현안 46, 공약 37)를 별도로 선별하였다. 주요 과제로는 ▲시장 직속의 원스톱 민원 서비스 제공 ▲서산 공항 유치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첨단화학 지원센터 구축 ▲바이오(그린, 화이트)·UAM·2차전지·수소 분야 신산업 발굴 및 추진 ▲대산석유화학 단지 종합대책 수립 ▲변화와 혁신을 위한 조직진단 추진 ▲농촌 공간 정비 사업 유치 ▲데이터 기반, 시정 열위 지표 도출 및 개선 등이 포함됐다.

## 충청남도 논산시

| 논산시 열린홍보실

소득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지수를 높이는 3高(고) 행정 주의  
‘논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  
섬김과 배려, 상생과 도약, 소통과 혁신 행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정책 펼칠 것...

논산시는 민선 8기 새로운 출범과 함께 ‘논산을 새롭게, 시민을 행복하게’를 시정 비전으로 삼고, ▲힘차게 도약하는 국방 친화 경제도시 ▲미래를 준비하는 친환경 농업도시 ▲추억과 낭만이 있는 역사 문화 관광도시 ▲소외 없는 따뜻한 복지 도시 ▲꿈을 키우는 행복한 교육 도시 등을 5대 시정 목표로 설정했다.

민선 8기 분야별 공약사업은 ▲누구나 일하는 경제도시 13건 ▲미래를 준비하는 농업도시 16건 ▲어디든 풍요로운 공유도시 17건 ▲다시 찾고 싶은 역사 문화도시 12건 ▲소외 없는 따뜻한 복지 도시 15건 ▲미래인재 육성 교육도시 11건 등으로 약 90%에 달하는 74개 사업이 임기 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소득을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고, 행복지수를 높이는 3高(고) 주의 행정’이 민선 8기의 바탕이 되는 만큼 공공기관, 대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바이오 식품산업 육성 등 새로운 성장동력 기반을 마련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방위사업청 및 육군사관학교 이전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국방산업단지 조기 완성 추진을 통해 스마트 국방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국방 안보 특례도시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또한, ‘농업이 살아야 논산이 산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스마트팜 육성, 농촌 발전기금 확대, 벤처 농업기술 육성을 추진해 미래 농업의 발판을 마련한다. 특히, 공약사항이었던 ‘농산물 수출·유통 촉진 및 지원센터’ 건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농업인 소득 안정화는 물론 농민들이 공들여 가꾼 농특산물과 농업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지속가능한 농업의 기반을 다진다.

이와 더불어 훈련소 내 관광투어, 육군훈련소 역사문화관 건립, 강경 근대역사 문화 체험 활성화 등 기존의 관광자원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적극적인 민자 유치 활동을 바탕으로 관광지 주변 다양한 시설과 인프라를 구축하여 관광 활성화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한다.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방안 등 탄탄한 복지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어린이 상상 놀이터 테마파크, 충남 남부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등으로 누구도 차별 받지 않고 다 같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복지정책도 추진한다. 특히 청년 지역사회 자립·정착 지원, 청년 창업 및 일자리 교육 등 청년 관련 정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인구 감소 등 지역 소멸 문제도 함께 극복해 나간다는 의지를 밝혔다.



## 충청남도 계룡시 | 계룡시 기획감사실

시정 비전, ‘행복이 넘치는 yes! 계룡’... 미래 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시정 운영 방향 제시  
민선 8기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한 중점 과제 추진

### 민선 8기 3대 목표 7대 전략을 통한 미래행복도시 구현 방안 마련

민선 8기 시정 비전으로서 ‘행복이 넘치는 yes! 계룡’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행복이 넘치는 젊고 지속가능한’ 긍정(yes) 에너지가 가득한 도시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3대 목표를 ▲스마트한 친환경 복지 도시 ▲軍(군)문화 랜드마크 조성 ▲역사·문화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설정하였다.

7대 전략은 ▲[행복한 동행] 시민 모두가 동행하는 행복한 계룡 ▲[친환경 복지] 살기 좋은 생태 전원 복지 도시 ▲[문화 관광 육성] 역사·문화 관광 스포츠 레저 융합도시 ▲[軍(군) 문화 발전] 최고의 軍(군)문화 랜드마크 도시 ▲[명품 교육] 모든 시민의 보편적 교육 혜택 ▲[지역 경제] 풍요로운 도농 복합도시 육성 ▲[소통 행정] 열린 행정 실현으로 지방자치 완성으로 계룡시만의 특성을 살린 軍(군)문화 중심의 랜드마크 조성을 통한 지역개발 및 살기 좋은 미래도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계룡시는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시민 기대감이 증폭됨에 따라 새로운 비전 및 정책목표 아래, 코로나19 이후 다가올 생활문화 및 사회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행정혁신을 통한 대민 행정서비스 제고 ▲첨단 스마트도시 조성 기반 마련 ▲공공기관 유치 ▲체계적 도시 개발로 지속적인 성장과 인구 유입의 발판을 마련키로 하고 이를 위해 공약사업과 더불어 주요 역점사업들을 모아 80여 개의 시정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 시행 중에 있다.

### 민선 8기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미래 발전 중점 추진과제 마련

민선 8기의 주요 핵심사업으로는 ▲2022 계룡 세계軍(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 ▲첨단 스마트도시 조성 기반 마련 ▲웰에이징 힐링 빌리지 조성 ▲두계천 생태공원 및 명품 둘레길 조성 ▲밀리터리 파크 조성 ▲밀리터리 미디어아트 뮤지엄 건립 ▲지식산업센터 건립

▲계룡 복합문화센터 건립 ▲ 청소년복합문화센터 건립 ▲계룡 국민체육센터 건립 ▲청년커뮤니티 센터 조성 등이다.

이러한 핵심사업 추진을 통해 계룡시는 시의 위상을 명품도시 반열에 올려놓고, 행복이 가득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표하고 있다.



## 충청남도 당진시 | 당진시 기획예산담당관

당진시 슬로건,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

시민과 함께 당진의 대도약 완성

### 민선 8기 6대 목표 4대 원칙 제시

민선 8기 당진시정 슬로건 ‘함께 여는 미래, 생동하는 당진’은 시민과 함께 당진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감으로써 역동적이면서도 조화로운 당진의 성장을 완성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6대 목표는 ▲시민 중심 소통행정 ▲활력있는 당진 경제 ▲풍요로운 농어촌 ▲생활 속의 문화·체육 ▲함께 누리는 교육·복지 ▲살기 좋은 도시·환경으로 정했다. 또한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한 시정원칙으로 ▲시민 중심 ▲현장 소통 ▲자율과 창의 ▲실용과 균형으로 설정하였다.

당진시는 시민 중심의 소통행정 실현을 위해 민원 처리 기간 획기적 단축과 시민 중심의 소통행정 강화, 과감한 행정규제 완화를 중점 추진한다.

또한 활력 있는 당진 경제의 완성을 목표로 국가 및 충남도 정책과 연계하여 ▲당진항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 조성 ▲수소 클러스터 조성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제2서해대교 건설 등을 추진해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한편 골목상권 활성화, 원도심 및 전통시장 활성화, 전통시장 재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스마트 원예 단지 조성과 대형 저온 저장고 신축, 제5 LNG 기지 연계 수산 식품 클러스터 조성, 지역별 특화작물 품목 육성지원, 6차 산업화 촉진 체협단지 조성, 장고항 6차산업 기지화 등을 통해 풍요로운 농어촌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기지시절다리기 박물관 주차장 확대 조성, 면천읍성 특화 거리 조성, 합덕제 복원, 도비도 및 난지도, 행담도 민자유치 개발로 체류형 명품 관광도시로 육성하는 한편,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 도시 근교 체육공원 조성으로 생활 속 체육 기반을 확충하고, 출생, 육아, 보육을 연계한 마더센터 건립과 청소년 수련관 건립, 산후조리비 지원 등 시민이 함께 누리는 행복하고 건강한 복지도시 구현에도 나선다.

한편 당진시는 은봉산 자연휴양림 조성 등 시민들을 위한 정주 여건 개선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 민선 8기 당진시 핵심 도시 브랜드 ‘그린 경제도시 당진’

당진시는 최근 인구가 줄고 지역 내 총생산액도 감소하는 등 매년 인구와 유치기업이 꾸준히 증가하던 과거 2000년대에 비해 성장이 정체되어왔다.

실제로 2017년 12월 말 기준 16만 7,439명이었던 인구는 2021년 12월 말 기준 16만 7,092명으로 0.2% 감소했으며, 지역 내 총생산액은 2016년 11조 6,751억 원에서 2019년 11조 3,844억 원으로 감소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당진시는 민선 8기 경제 회복을 넘어 친환경 산업 중심의 그린 경제 도시를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민선 8기 도시 브랜드를 ‘그린 경제도시’로 정한 당진시는 친환경 그린 경제를 중심으로 발전하는 도시, 성장 자원의 총량을 키우고 그 결과가 주거와 교육, 복지, 문화 등 정주 여건 향상으로 선순환되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당진시는 이를 실현하기 위한 민선 8기 10대 브랜드 사업을 확정했다. ‘그린 경제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해양관광 복합단지 개발 ▲신규 산업단지 조성 ▲수소 산업클러스터 조성 ▲석문국가산업단지 탄소 밸리 조성 ▲당진 합덕 역세권 개발 ▲농업 신제품 및 신제품 개발 등 6개 대표사업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도심 속 명품 호수공원 조성 ▲일자리 1만 개 창출 ▲고등학교 신설 ▲24시간 의료체계 구축 등 4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실현하기 당진시는 각종 인허가 원스톱 처리를 통해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행정 조직을 개편해 기업지원과 투자 유치에 주력하는 한편 지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산업도 함께 육성하여 당진의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부곡공단 일원>

## 충청남도 금산군

| 금산군 기획팀

군정 비전,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

과감한 도전으로 행복을 키우는 군정 운영 방향 제시

민선 8기 5대 중점 전략을 선정, 세계로 도약하는 활기찬 군정 추진

### 민선 8기 5대 전략 마련, 세계로 비상하는

### 폭넓고 활기찬 군정 발전방안 마련

민선 8기 금산 군정의 비전인 ‘생명의 고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는 세계를 향한 과감한 도전을 통해 지역발전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지역의 자긍심을 고취하며 군민의 희망과 행복을 키우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생명의 고향 금산’이란 금수강산의 본고장으로서 아름다운 비단 강과 비단 산을 보유하고 있는 금산은 인류의 영약 고려인삼의 종주지로, 하늘 선물 금산인삼을 통하여 세계인들의 건강을 지키고 키울 수 있는 생명의 고향임을 뜻하고 있으며 ‘세계로 미래로!’라는 과감한 도전을 통해 과거 “생명의 고향 미래의 땅 금산” 군정 구호를 구체화하고 세계로 뻗어 나가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금산의 훌륭한 유전자인 근면과 도전, 진취적 기상을 바탕으로 금산 인삼약초산업의 중흥과 세계화를 통해 인삼 산업 종주지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밝은 미래를 지향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민선 8기 목표를 ‘과감한 도전, 커가는 행복’으로 설정하고 5대 중점 전략 ▲찾아오는 매력도시 ▲중흥하는 경제도시 ▲건강 힐링 행복도시 ▲세계 속의 인삼 수도 ▲신뢰받는 희망 군정으로 설정하고 116개 공약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민선 8기 비전 및 목표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로 ▲줄어드는 인구에서 역전하는 인구정책 추진 ▲천혜의 자연과 한방을 활용한 힐링 관광 ▲문화·예술·체육 명품화 ▲대규모 산업 기반 조성 ▲100세 건강 환경 조성 ▲인삼 세계화 프로젝트 ▲진생토피아(인삼+유토피아) 등 역점사업을 추진하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

군민의 희망과 행복을 키우고, 군정의 폭을 넓혀 무너진 자신감을 회복하고 자긍심을 고취하여 국내를 넘어 세계로 비상한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자율과 창의를 중시하는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지역 지원 방침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역 내외부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를 통해 군정의 기획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지역발전을 견인할 계획이다.

생명의 '교향' 금산, 세계로 '미래로'!

## 충청남도 부여군 | 부여군 기획조정실

군정 비전 ‘함께 만드는 더 큰 부여’.. 소통과 화합, 공정과 가치로 군정 운영 계획  
농업, 관광, 경제, 복지, 지역발전, 지속 가능 등 6대 분야 중점 추진



### 민선 8기 군정 운영 4대 원칙·방향, 6대 군정 목표, 5대 성장동력 정립

민선 8기 군정 비전을 ‘함께 만드는 더 큰 부여’로 선정했다. 주민 체감형 정책을 통한 삶의 질 개선 소득보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적극적인 기업·투자 유치, 군민 주권 강화 등 군민과 함께 참여와 공감에 살아있는 부어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슬로건은 ‘행복한 동행 따뜻한 부여’이며, ▲소통 ▲화합 ▲공정 ▲가치로 정한 군정 운영 원칙에는 사람 중심, 군민 중심 열린 군정을 실현하겠다는 군정 철학이 담겨있다. 군정 운영 방향은 ▲활력 ▲도약 ▲상생 ▲미래로 정하여 활기 넘치는 도약을 통해 상생하는 미래를 개척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에 맞춰 군정 목표는 ▲살기 좋은 농촌 ▲문화관광 특화 ▲도약하는 경제 ▲함께하는 복지 ▲지역 맞춤 발전 ▲지속 가능 미래로 정했다. 5대 성장 동력으로는 ▲농림축산 ▲문화관광 ▲산업경제 ▲환경 친화 ▲국정 시책을 제시하여 향후 생활인구 10만 활력 도시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 군민 소통을 통한 민선 8기 주요 공약사업 수립

부여군은 정책 워크숍, 군민설명회, 주민배심원 회의라는 3단계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군민의 뜻이 담긴 민선 8기 공약사업을 확정, 추진할 예정이다. 군정 목표별 주요 공약사업으로는 살기 좋은 농촌 분야의 ▲유기농 산업복합 서비스 지원 단지 구축 ▲충남 광역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조성, 문화관광 특화 분야의 ▲카누슬라럼 국제경기장 조성, 도약하는 경제 분야의 ▲기업 투자유치 전담부서 설치, 지속 가능 미래 분야의 ▲자원순환 도시 조성 ▲지속 가능발전(SDGs) 추진 강화, 함께하는 복지 분야의 ▲청년기금을 통한 청년 지원 정책 활성화, 지역 맞춤 발전 분야의 ▲농촌협약을 통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확대 강화 등이 있다.

# 충청남도 서천군

| 서천군 기획감사실

군정 비전, ‘풍요로운 미래 성장도시 서천’...

새롭게 도약하는 군정 운영 방향 제시

## 서천군, 민선 8기 군정 목표 및 발전방안 마련

‘풍요로운 미래 성장도시 서천’을 만들기 위한 힘찬 발걸음이 시작됐다.

민선 8기 군정 비전으로서 ‘풍요로운 미래 성장도시 서천’은 군민 모두가 잘살고 누구나 살고 싶은 신성장 경제 도시로 제2의 도약을 하겠다는 정책 기조 실현의 의지를 담았다.

군민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슬로건은 ‘잘사는 군민! 살고 싶은 서천!’으로 정해 군민 중심의 역동적인 군정을 펼쳐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 찬 더 나은 내일의 서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굳게 담아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5대 전략목표를 ▲모두가 잘사는 상생 경제 ▲골고루 누리는 지역발전 ▲사람이 소중한 교육복지 ▲누구나 오고픈 매력 서천 ▲군민을 섬기는 감동 행정으로 설정하였다.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적극적인 투자유치로 기업이 찾아오고 투자하기 좋은 서천을 만들고, 청년 일자리와 어르신 일자리, 여성, 장애우와 다문화 가정 등 근로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를 대폭 늘려나가 서천을 돈 벌 곳, 돈 쓸 곳 많은 도시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장항국가산업단지 내 해양 바이오 산업화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글로벌 해양바이오 클러스터와 국내 보안산업 성장 기반인 국가 보안 검색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미래 신성장산업 도시로의 도약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화관광 분야와 관련해서는 한산모시, 서천갯벌 등 세계가 인정하는 서천의 다양한 역사, 문화, 관광자원 등을 융복합시켜 서천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색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품격

있는 명품관광 도시로의 위상을 확고히 할 계획이다.

교육복지 분야는 서천에서 내가, 자녀가, 부모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생애 전 주기 맞춤형 교육복지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에 있어도 수도권과 견줘 격차 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탄탄한 교육 인프라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천군의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치우침 없이 군민 누구나 어느 곳에서도 서천 발전의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서천읍 농촌중심지 사업 ▲장항 RE-Fine 문화 재생 활력 사업 ▲서천군 특화 상권 재생 사업 등을 중점 과제로 내놴다.

이 외에도 ▲옛 장항제련소 오염정화토지 생태복원 사업 ▲지속적인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부 예산 확보 ▲장항 국가생태산업단지 100% 분양, 1조 원 투자유치 ▲서천군 문화예술회관, 생활 체육관 등 시설 건립 ▲어촌뉴딜300사업 ▲지역 활성화 연계 경관도로 건설 등 서천군의 현재와 미래를 위한 현안 추진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옛 장항제련소 오염정화토지 생태복원 사업’은 생태복원을 통한 지역 성장과 소멸위기 극복의 대표 모델 창출로 민선 8기 새로운 지역발전 선도사례로 만들어가겠다는 당찬 의지를 표하고 있다.





## 충청남도 청양군

| 청양군 기획감사실

군정 비전 ‘다 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민선 7기 군정 방향 유지·발전

민선 8기 5대 목표 18개 전략과제 중점 추진

### 민선 8기 5대 전략, 18개 과제 중점 추진으로

#### 민선 7기 기조 유지·발전 역량 집중

‘다 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는 민선 8기 군정 비전으로서 군민 모두가 합심해 일궈내야 할 우리 모두의 과제이자 사명임을 내세우며 강한 군정 의지를 담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군정 5대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농민이 자랑스러운 농촌 ▲튼튼한 지역 순환 경제 ▲따뜻한 희망 공동체 ▲꼭 가보고 싶은 매력 도시 ▲군민이 주인인 참여행정이다.

민선 8기 5대 전략으로는 ▲인구 5만 자족도시 기반 마련 ▲농업인이 행복한 지역 조성 ▲최고 수준 건강 100세 복지 모델 창출 ▲관광객 500만 명 시대 개막 ▲주민 중심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한 군정 18개 과제로는 ▲지역 성장동력 사업을 통한 일자리 및 소득 창출 ▲농업소득 증대와 안전한 먹거리 생산 기반 구축 ▲어린이에서 어르신까지 돌봄 시스템 구축 ▲3대 관광권역 개발을 통한 문화·관광·휴양도시 조성 ▲10개 읍·면 주민자치회 전환 및 역량 강화를 통한 동네 자치 실현 등을 마련하였다. 세부 사업은 공약 71개와 역점 29개 등 총 100여 건을 중심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민선 8기 ‘청양 변화’와 ‘군민 행복’ 목표로 핵심과제 추진

민선 8기 최우선 과제는 인구 5만 자족도시 조성이다. 이를 위해 ▲대규모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900억 규모의 민간자본 유치와 수소특화단지 조성 ▲충남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을 통한 청년층 유입과 일자리 마련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지난 임기 4년 동안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남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과 광역형 탄소중립 연수원, 충남교육청의 학생건강증진 통합교육체험관 등을 유치했다.

인구 5만 자족도시를 향한 중장기 로드맵을 세우고 반드시 이룰 수 있다는 신념과 군민, 행정이 함께 역량을 모아 행복한 지역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계획이다.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청양 일반산업단지 조성>



<사회적 경제혁신타운 조성>



<청양 먹거리직매장(유성점)>

## 충청남도 홍성군

| 홍성군 기획감사담당관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 군민을 위한 헌신과 화합의 군정 비전 설정!

‘충남의 중심, 밝은 미래 홍성’을 목표로 5대 추진전략 수립

### 민선 8기 환황해권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 수립

홍성군은 민선 8기 최우선 가치를 ‘군민’으로 삼고 군민을 위한 헌신과 화합의 의미를 담아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을 군정 비전으로 확정하였다.

‘따뜻한 동행’은 모든 군민에게 공평하고 차별 없이 따뜻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따뜻한 가슴으로 배려하는 군정의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행복한 홍성’은 따뜻한 동행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살기 좋은 홍성의 미래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

홍성군에서는 ‘따뜻한 동행, 행복한 홍성’을 만들어가기 위한 5대 추진 목표를 ▲활력 있는 지역경제 ▲살기 좋은 농어촌 육성 ▲찾아오는 문화관광 도시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 ▲공감하는 참여 군정으로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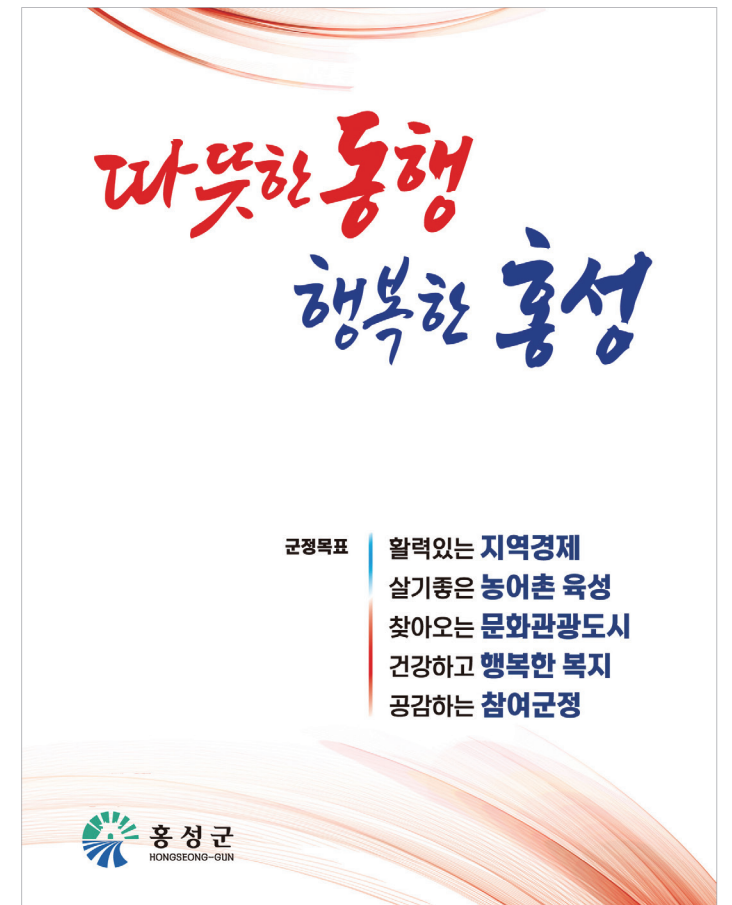
특히 경제 활성화를 군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일자리 창출을 통한 인구 유입 유도과 체류형 관광 산업 집중 육성으로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한편 주요 기반 시설 확충과 더불어 함께 잘사는 복지 공동체를 실현하여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홍성군을 만들기 위한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하였으며, 지역별 발전전략으로 ▲내포신도시 충남혁신도시 완성 ▲원도심과 내포신도시의 상생발전 ▲천수만 해양 관광거점 조성 ▲농어촌 생활 여건 개선 ▲유기농업 특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등 지역 상생 균형발전을 위한 추진전략을 밝혔다.

### 군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위한 100건의 공약 마련

민선 8기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지역경제, 농어촌 육성, 문화관광, 건강복지, 참여 군정 등 5개 분야 100건의 공약사업을 선별하였으며 역점과제로는 ▲충남혁신도시 이전 공공 기관 유치 및 종합병원 설치 ▲홍성군 시 전환추진 ▲홍주읍성 및 홍주성지 관광 인프라 구축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원도심 활성화 ▲서해 KTX 경부선 조기 연결 ▲천수만

복합해양 관광공원 조성 ▲홍성 역세권 개발 ▲축산농가와 지역주민이 상생하는 축산시스템 구축 ▲친환경농업 확대 및 활성화 ▲풀뿌리 주민자치 실현 등 다양한 발전 과제를 마련하였다.

군민과 따뜻한 동행을 이끌고 행복한 홍성을 만들기 위해 홍성군은 민선 8기 제1호 결재로 내포 뉴그린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여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제1호 지시사항으로 공동주택 보안 등 전기요금 지원을 통해 주민 편의 개선에 노력하는 등 역동적인 군정을 추진하고 있다.



## 충청남도 예산군

| 예산군 기획담당관

군정 구호, ‘새로운 내일 하나 된 예산’... 최초 50대 민선 군수 “활기찬 예산 시대”

민선 8기 공약으로 5대 분야 48개 단위 사업, 67개 세부 실천 사업 추진

### 양질의 일자리 창출 경제회복 최우선 과제...

#### 임기 내 재정 1조 원 시대 목표

민선 8기 군정 구호로서 ‘새로운 내일 하나 된 예산’은 역대 군수들이 이룩한 업적과 전통을 계승해 군민의 뜻을 하나로 모으고 화합을 통해 발전 성장하는 예산을 조성하겠다는 최 군수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5대 목표를 ▲군민 중심의 열린 행정 ▲활력있는 지역경제 ▲오감 만족 문화관광 ▲함께하는 나눔 복지 ▲살고 싶은 명품농촌으로 설정하였다.

예산군의 가장 시급한 현안인 경제 회복을 위해 ▲일자리가 넘치는 충남경제 중심 예산군을 만들고, 대규모 국비 확보와 민간기업 유치를 통해 재정 1조 원 시대를 열고 더불어 내포 혁신도시에 수도권 공공기관을 적극 유치해 지역 내포신도시 발전을 더욱 앞당길 방침이다. 또한 친환경 산업단지 4개 산단, 138만 평을 조성해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 활력을 불어넣을 계획이다.

특히 문화와 관광으로 르네상스 창출을 위해 ▲예당관광지 출렁다리와 함께 모노레일 설치와 문화마당 조성을 통해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거리 및 휴양공간을 제공해 체류형 관광 메카로 발돋움 하고 신 도청 시대 사통팔달 교통 요충지와 원도심 상권 부활에 집중할 계획이다.

### 민선 8기의 가시적 성과 창출을 위한 5대 분야 48개 단위 사업,

#### 67개 세부실천사업 추진

민선 8기 임기내 가시적 성과창출을 위해 5대 분야 48개 단위 사업, 67개 세부 실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5대 분야로는 ▲일자리가 넘치는 충남경제 중심 예산군 ▲예우받는 어르신, 소외 없는 복지 예산군 ▲농업인이 대우받고 소득이 보장되는 예산군 ▲문화와 관광으로

르네상스 시대 창출하는 예산군 ▲신 도청 시대 사통팔달 교통 요충지 및 원도심 상권 부활 예산군 등이다.

또한, 중점 추진할 사업으로는 충남 내포 혁신도시 발전과 원도심 활성화, 다양한 복지정책, 차질 없는 삽교역 신설, 공주대 예산캠퍼스 의대 설립,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와의 지역 상생 프로젝트 등이 있다.

군민의 눈높이에서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행정을 펼치겠다는 민선 8기 최재구 호의 멋진 향해를 기대해본다.





## 충청남도 태안군

| 태안군 기획예산담당관

민선 8기 『더 큰 태안, 더 풍요로운 내일』을 위한 힘찬 도약!

태안군민 모두의 더 풍요로운 삶을 이끄는 25대 전략과제 강력 추진

### 민선 8기 25대 전략, 92개 공약사업 추진을 통한

#### ‘군민의 삶의 질 향상’, ‘경제적 풍요’ 실현

민선 8기 태안군은 민선 7기에 이어 “날자 새 태안이어, 더 잘사는 내일로!”를 군정 목표로, 화합과 통합 열린 행정, 풍요와 생동 희망 경제, 상생과 배려 생활복지, 사람과 자연 청정 개발, 감동과 만족의 힐링 관광이라는 군정 방침 아래 태안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태안군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코로나19 대위기로 인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 6만여 태안 군민들께 더 풍요로운 미래를 만들어 드리하고자 ▲태안군의 발전을 견인할 성장동력 확보, ▲태안경제 부양 및 지역개발, ▲힐링 관광 육성, ▲사회안전망 확충 및 복지 사각 지대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이를 뒷받침할 92개 단위 사업을 수립하고, 집중적으로 추진할 25대 전략을 마련하였다.

‘더 잘사는 태안 구현’이라는 강한 포부와 의지를 담아 선정한 25대 전략사업은, ▲자연에너지 연금형 이익공유 시스템 구축, ▲서울대학교 교육연수원 건립, ▲관광 중간조직(DMO) 신설, ▲군민 중심 열린 행정 구현, ▲공무원 근무 환경 혁신적 개선, ▲소상공인 지원센터 건립, ▲지역마케팅·브랜드 강화,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태안화력 폐쇄 대응 전략 추진, ▲고령 농어업인 건강검진 신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시스템 구축, ▲효도수당 강화,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국도 38호선, 고속도로, 철도), ▲최고의 해양치유센터 건립, ▲도심 항공교통 전진기지 육성(UAM), ▲통합 치유형 테마파크 조성, ▲태안다움 휴양 관광도시 조성 등이 있으며, 군정의 역량을 집중하여 실행력 높은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한 『신해양도시 태안』으로의 도약

민선 8기에는 태안군의 경제적 풍요를 이끄는 ‘신산업 육성’에 역점을 둘 예정으로, 태안 해양 치유센터를 중심으로 해양 치유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해양 치유와 관광이 한데 어우러진

‘태안다움 힐링 도시’를 조성하고, 태안 UV랜드를 중심으로 태안기업 도시를 도심항공교통(UAM) 전진기지로 육성하여, ‘신해양도시 태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열린  
마  
당



오늘도 깊어져만 가는 농민들의 주름살

열린  
마당

개방농정, 관세 철폐, 가격 하락, 수입농산물...  
오늘도 깊어져만 가는 농민들의 주름살

임선택 |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사무국장

전 세계를 휩쓸었던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은 질병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답이 아님을 깨닫게 했으며, 각국은 자기 먹거리 확보를 위해 두 팔을 걷고 나서기 시작했다. 기름 없이 굴러갈 차가 없듯 식량을 먹지 못 한 사람은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 식량은 농산물을 생산 하는 농민, 식품의 재료를 준비하고 요리하는 소비자 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전 사회가 책임지고 확보해야 할 대상이다. 오죽하면 인간 생활의 기본 조건을 의식주라고 표현했겠는가.

몇 해 전 충남에서 농민수당 조례제정 운동이 힘차게 진행되었다. “농민은 농산물 생산과 더불어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만들고 있기에 그에 합당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발의된 조례제정 운동은 36,793명의 서명을 받아 도의회에서 승인, 현재 농민들에게 지급되고 있다. 그 공익적 기능으로는 식량 공급, 환경보호, 생태계 보전, 지역공동체 유지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 공익적 기능을 담당하는 주체는 농사를 업으로 삼고 있는 농민들이다.

공익적 가치를 생산하며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삶은 어렵기만 하다. 우리는 “한국인의 힘은 밥심”이라고 표현하는 문구를 심상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리고 식당마다 밥 한 공기 판매가격이 평균적으로 1천 원에서 2천 원가량 한다는 사실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생산자에게 돌아가는 가격은 얼마나 될까? 채 3백 원이 되지 않는다. 이 사실을 말하면 소비자는 놀라기만 한다. 쌀값이 더욱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더욱 놀란다. 소비자가 사는 밥 한 공기 가격은 하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이 지게 되는 것이다.

올해 쌀값 하락 피해의 요인은 여러 부분이 있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변동직불금 폐지로 인해 생긴 쌀 시장격리 제도였다. 법적으로 정해진 5년간의 쌀 평균 가격에 비해 그 해 쌀값이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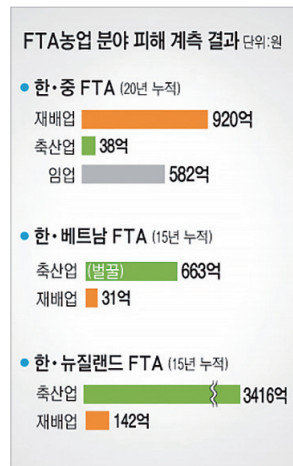
1) 농업의 공익적, 다원적 가치는 각 주장에 따라 환산되는 금액에 차이가 있다. 다만 도시화 완화, 농촌공동체 활력, 파란치 기능 등의 사회적 기능과 홍수 방지, 수자원 함양, 토양과 생물다양성 보전의 환경적 기능, 식량을 공급하는 국가 전략적 기능의 식량안보, 전통문화를 계승, 경관을 제공하는 등의 문화적 기능 등 그 다양한 가치는 손에 꼽을 수 없이 많다고 분석되고 있다.

하락할 경우 차액분의 80%를 지원해주는 제도가 변동직불금이었다. 직불금 제도를 정리하며 정부는 변동직불금을 폐지하고 공익형 직불금 체계를 만들었다. 이에 쌀 생산자들의 가격 보전에 대한 대비책이 없어진다는 우려 아래 만들어진 제도가 시장격리 제도다. 그러나 2021년 시장격리 제도는 제때 시행되지 않았다. 이는 시장에서 쌀값 하락으로 이어졌고, 한 번 하락한 가격은 올라올 줄 몰랐다. 쌀을 내놓지 못한 농민들의 창고에는 팔지 못한 나락이 그대로 쌓여 있다.

이런 가운데 2022년 2월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직을 겸하고 있던 홍남기 부총리는 서울 양재 농협 하나로마트를 방문하여 “쌀값이 생산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있다”며, “김장 채소, 쌀, 축산물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수급관리와 할인행사 등을 통해 가격안정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마치 물가상승의 주된 요인이 농산물 가격인 것처럼 발언했다. 그리고 그날 발표된 1차 시장격리 입찰 결과는 농민들을 실의에 빠지게 했다. 더욱 낮은 가격을 써낼수록 유리한 방식으로 진행된 경매는 전년도 공공비축미 가격에서 딱 1만 원씩 하락한 40kg당 6만 3천 원대에서 가격이 결정되었다. 입찰이 되어도, 낙찰되어도 우리 농민들은 울상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방식의 시장격리 제도였던 것이다.

농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FTA라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다. 체결과 비준을 통해 합법적으로 관세를 낮추고 들어오는 외국 농산물로 인한 피해액은 정부 추산에서조차 천문학적 금액이다. 한국과 FTA 체결 국가 중 3개국과의 피해액만을 계측한 것임에도 합산 금액은 5천억 원에 가까운 수치가 된다. 종료된 협정이 아니라 진행 중인 협정이라 결과가 우려스럽기만 하다. 그런데도 정부 눈에는 아직 만족스럽지 않았나 보다. 이번에는 메가FTA 정책의 일환, CPTPP라는 다자간 FTA에 가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어로도, 영어로도 발음하기 어려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이라는 뜻의 CPTPP는 지난 4월 현재 11개국이 가입되어 있고 2022년 현재 싱가포르가 의장국이다. 11개국 중 우리와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9개 국가에 이른다. 굳이 2중으로 FTA를 체결할 필요가 없음에도 CPTPP에 가입하겠다는 것이며, 기존 가입 회원국들에 대한 한국의 수출액 비중도 이미 22.5%에 달한다고 한다.<sup>2)</sup>

CPTPP 가입요건은 가입국 만장일치 승인이다. 이는 각국의 요구사항을 들어줘야 한다는 전제가



2) 2022년 2월 9일 농기자재신문 발췌.

불을 수밖에 없다. 대만의 경우 CPTPP 가입을 위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일본의 강력한 요구였던 ‘후쿠시마 식품 수입’을 허용했다. 후쿠시마 뿐이겠는가. 역사상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바라볼 때 본인들 입장으로 역사기술을 요구할 수 있다. 세계적인 축산국가 뉴질랜드, 쌀 생산의 대표국가 베트남 등과도 교역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수산업 역시 천문학적 피해가 예상된다. 우리 해역의 주된 어획 종이 가입국들의 멸종 어종일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기준이 정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가입국에 피해를 주는 정책이라고 판단될 경우 정책을 폐기하도록 제재할 수 있는데, 만약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제공되는 면세유가 그 정책에 해당한다면, 수산업 종사자들의 생산비는 견잡을 수 없이 폭등할 것이다.<sup>3)</sup> 그래서 이미 수차례 농·수·축·임업 등 종사자들과 소비자 단체가 함께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충남에서도 이미 CPTPP 가입 저지 충남운동 본부를 결성하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도민에 대한 선전홍보사업과 서명운동에 돌입, 가입 저지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아직 2021년산 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지만 약 두 달 뒤 본격적인 수확 철이 도래하면 2022년 수확된 신곡이 시중에 풀릴 것이다. FTA로 도산한 농가들이 많았음에도 CPTPP로 다시금 농민을 포함한 전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열심히 키운 농산물 수확의 기쁨은커녕 농민들의 주름살이 깊어지는 현실, 우리의 생존권을 지키겠다며 거리고 뛰쳐나오고 있는 노동자와 농민, 시민들을 바라보고 있자니 서글퍼진다. 누군가가 했던 말로 글을 줄인다. “언제쯤이면 마음 놓고 농업을 권하는 사회가 될까? 그런 날이 오기는 할까?”

3) 농업 면세유 역시 2021년 3/4분기 리터당 평균 700원대 후반이었음에 반해, 2022년 7월 현재 1,700원대에 달하고 있다. 기계를 많이 써야 하는 농민들에게 기름값이 2.5배 상승한 것은 당연히 생산비의 폭등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언론이  
바라본  
충남

○ ● ○

필요충분조건 충남공항

언론이  
바라본  
충남

## 필요충분조건 충남공항

박계교 | 대전일보 충남취재본부장

국민들이 낸 세금이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잘 쓰이고 있는 것일까? 국민들의 눈에는 누군가의 힘으로 정책이 결정되고, 필요한 예산이 집행되는 과정을 많이도 봐왔기에 적정성에 부정적 시각이 있는 게 사실이다. 무엇보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사회간접자본시설(SOC)은 가히 정치노름에 가깝다. 공항이 대표적일 것. 정권에 따라 생긴 지방 공항은 골칫거리가 된 지 오래다. 영·호남에 집중된 우리나라 지방 공항 14곳 중 흑자를 내는 곳은 손에 꼽힌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2020년 지방 공항 14곳 중 제주공항을 제외한 13곳의 지방 공항이 적자를 냈다. 적자 규모만 보면 연 1,000억 원을 넘겼다.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지만 코로나19 이전에도 지방 공항은 만성 적자에 허덕였다. 지방 공항이 정확한 수요예측보다는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 산물이었기 때문이다. 고통 부담은 오롯이 국민들 몫이다.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권 차원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띄웠다. 다분히 정치적이다.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가덕도 신공항'을 건설하는 데 필요한 절차 중 하나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의 얘기가 오갔다. 결국 올해 4월 기획재정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비용은 13조 7,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가덕도 신공항'은 사전타당성 조사에서 분석한 결과 비용편익분석(BC) 비율은 0.51~0.58에 그쳤다. BC가 1에 한참 못 미치기에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얘기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라는 특혜 시비와 함께 경제성이 없기에 예산 낭비까지 문제 투성이 사업이다. 그래도 정치권이 밀어붙인 사업인 만큼 '가덕도 신공항'은 2035년 개항을 목표로 순항 중이다.

그럼, 충남은 어떨까. 전국 도 단위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공항이 없는 곳이 충남이다. 충남에 공항이 없다 보니 불편은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간다. 인천공항을 기준으로 볼 때 천안시 130km, 아산시 120km, 서산시 140km, 태안군 160km, 당진시 120km, 공주시 180km, 내포신도시 145km 등으로 멀다. 시간·경제적 부담이 크다.

충남도와 서산시가 이러한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곳으로 지목한 곳이 서산시 해미면에 있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이하 20비)이다. 20비에서 충남도청이 있는 내포시까지 30km, 태안군 29km, 당진시 36km, 공주시 77km 등 충남도 일선 시군 대부분에서 70km 안팎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20비가 서해안고속도로 해미IC까지 6km정도밖에 떨어진 것도 이용객들의 접근적 장점이 있다. 충남 공항은 청주공항이나 군산공항처럼 군 비행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막대한 건설비용을 줄일 수 있다. 11.9㎢ 면적의 20비는 김포공항 7.3㎢보다 규모가 크고, 길이 2,743m와 폭 46m의 활주로 2개가 있다. 여객터미널과 계류장, 유도로, 진입도로, 주차장 등 공항 구색을 갖추는데 필요한 예산은 국토부 추산 509억 원이다. 사업비가 500억 원을 넘어가기에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토부가 2017년 진행한 ‘서산 군 비행장 민항시설 설치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에 따르면 서산 민항 건설사업은 BC가 ‘1.32’로 ‘1’을 상회,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왔다. 항공 수요는 연간 37만 8,000명, 생산 유발 506억 원, 부가가치 158억 원, 일자리 224명 등으로 보고 됐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공항이 필요하다고 떼를 쓰는 게 아니다. 정치권에 휘둘리지 않는 공정한 기회를 부여받고 싶은 것이다.



# 인권 A t o Z

○ ● ○

충남연구원의 인권경영 수준, 어디까지 와 있는가?

# 충남연구원의 인권경영 수준, 어디까지 와 있는가?<sup>1)</sup>

강마야, 강수현, 김정희, 여형범, 전지훈, 조봉운 | 충남연구원 연구자(가나다순)

인권영향평가란  
무엇이고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 조직의 인권경영 수준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를 어떻게, 어떤 도구로 평가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인권영향평가’라는 도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인권<sup>2)</sup>이란 모든 사람에게 부여되는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를 의미한다. 누구나 국적, 거주지, 성, 인종, 민족, 종교, 문화유산과 관계없이 태어날 때부터 동등한 인권을 누릴 자격이 있다. 그리고 조직의 체계나 활동이 구성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인권영향평가와 같은 도구로 조직의 인권경영 수준을 살펴보게 되는 것이다.

충남연구원 인권경영센터는 연구원 내 인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2022년 상반기에 인권영향평가(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HRIA)<sup>3)</sup>를 실시하였다. 평가과정을 통해서 인권에 대한 관심과 소통이 늘어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연구원 구성원이 직접 평가과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충남연구원 인권영향평가는 인권경영센터 운영규칙 제25조(인권영향평가) 및 제26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1단계 사전 준비, 2단계 실행계획, 3단계 내부 검토 및 영향평가, 4단계 외부자문을 통한 권고사항 도출, 현재 5단계에서는 평가 결과를 반영한 제도 개선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있다([그림 1] 참고).

충남연구원  
인권영향평가는  
어떻게 진행  
되었는가?

1) 주 : 강마야 외(2022)의 “2021년 충남연구원 인권영향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현안과제연구, 충남연구원)”에서 일부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 및 재구성함(저자 주). 이하 그림의 출처 또한 이로부터 나왔기에 별도의 표기는 생략함.  
2) 주 :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은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및 2개의 동 규약 선택 의정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으로 구성, 30개 이상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분명히 나타냄.  
3) 주 : 인권영향평가란, 기관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 혹은 잠재적 인권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말함. 주요 원칙은 대중의 참여(public participation), 평등과 비차별(equality), 투명성과 정보 접근성(transparency and access to information), 책임성(accountability), 지속적인 실현(principle of progressive realization) 등으로 참여적 분석적 방법을 사용하여 체계적이고 구조적으로 평가함.

| 그림 1 | 충남연구원 인권영향평가 절차



충남연구원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인권경영체크리스트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제시한 내용을 준용하여 총 10개 분야, 27개 항목, 90개 세부 지표로 재구성하였다. 크게 인권경영체제의 구축,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강제노동의 금지, 작업장 환경 및 안전보장, 공급망 인권 증진 및 보호, 지역사회 인권 증진 및 보호, 환경의 보호, 소비자(이용자) 보호, 부패 방지 등 10가지 분야이다. 연구진이 수행한 내용은 지표별 현황 점검 및 기초분석 실시, 인권경영에 기반한 적극적인 규정·규칙 해석과 의견 개진, 내부 지침 마련 및 제도개선 건의 등이다([그림 2] 참고).

| 그림 2 | 충남연구원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내용

구분	분 야	설 명	항 목	구분	분 야	설 명	항 목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기관은 인권경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1. 인권중증 정책선언 2.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3. 인권경영 제도화를 위한필요조치 4. 인권경영 성과 5. 구제절차 마련 연구참여자 : 사회통합연구실 전지훈	6	공급망 인권증진 및 보호	기관은 공급업체 등을 포함한 협력기관이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협력기관 인권보호 의무이행 확인 2. 협력기관 인권보호 준수 모니터링 연구참여자 : 자부도시문화연구실 조봉운
2	고용상의 비차별	기관은 고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연령, 인종, 장애, 종교, 출신 지역, 정치적 성향 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1. 고용상 비차별 2. 고용 상 남녀비차별 3. 비정규직 노동자 비차별 4. 외국인 노동자 비차별 연구참여자 : 경제산업연구실 강수현	7	지역사회 인권증진 및 보호	기관은 기관활동이 지역 현주민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1. 지역사회 인권증진 및 보호 노력 2. 지역사회 인권침해 모니터링 연구참여자 : 공간환경연구실 여형범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기관은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허용하며, 노동조합에의 가입이나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1. 결사·단체 교섭의 자유 2.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3.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4. 노동조합 부재시 대안적 조치 연구참여자 : 경제산업연구실 강수현	8	환경의 보호	기관은 환경문제에 대해서 예방적 접근의 원칙을 견지해야 하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통제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1. 환경경영체제 수립 2. 환경문제에 대한 예방적 접근 원칙 연구참여자 : 공간환경연구실 여형범
4	강제 노동의 금지	기관은 노동자를 고용함에 있어서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도 이용해서는 안되며, 강제노동으로부터 그 어떠한 영업적 이득도 얻지 말아야 한다.	1. 강제노동 금지 2. 공급업자-협력기관 등에 의한 강제 노동 예방 연구참여자 : 경제산업연구실 강수현	9	소비자 (이용자) 보호	기관은 소비자(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및 알 권리 보장 등 필요한 조치를 제공해야 한다.	1. 소비자 알권리 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 연구참여자 : 공간환경연구실 여형범
5	작업장 환경 및 안전보장	기관은 노동자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1. 시설 안전과 위생 조치 실시 2. 취약노동자 안전과위생조치실시 3. 안전보건 교육 정보제공 및 실시 4. 산업재해 피해노동자 지원 연구참여자 : 자부도시문화연구실 조봉운	10	부패방지	기관은 부패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부패방지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실천해야 한다.	1. 부패방지 경영 연구참여자 : 사회통합연구실 전지훈



## 충남연구원 인권영향평가의 결과와 시사점은 무엇인가?

충남연구원이 각 지표를 만족하는 제도를 갖추거나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점수로 표시하였다(정량평가). 고용상의 비차별·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지표에서는 100점 만점, 작업장 환경 및 안전보장 지표에서는 95점, 부패 방지 지표에서는 90점, 인권경영체계의 구축·강제노동의 금지·소비자(이용자)보호 지표에서는 80점대, 지역사회 인권 증진 및 보호·환경의 보호 지표에서는 50점, 공급망 인권 증진 및 보호에서는 25점으로 평가되었다([그림 3] 참고). 상대적으로 높은 정량평가 점수를 나타낸 지표에서도 여러 가지 한계나 문제점이 나타났다.

**①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분야** : 충남연구원은 2019년 7월 인권경영센터를 전국 연구기관 중 최초로 개소, 2020년 1월 인권경영 선포식을 실시하여 인권 존중 정책선언과 함께 인권경영을 위한 대내외적 업무를 수행 중이다. 인권 증진을 위해 인권교육, 인권침해의 예방, 구제절차를 마련하여 정착 중이나 아직 인권경영 실태조사나 인권경영 점검, 결과 보고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 등은 적극적인 정보공유와 의견수렴 단계에서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인권경영 전담 조직이나 구제·보고 절차들은 모두 갖추고 있지만 전 직원 대상의 적극적 홍보와 활발한 상호교류를 통한 구성원 요구와 변화에 부응하기 위한 실행은 미흡하였다.

**② 고용상의 비차별 분야** : 구성원에게 직접적이며 가장 민감할 수 있는 분야이지만 각종 제도 마련을 통해 정량평가 100점 만점을 기록하였다. 정부 기조 및 사회적 요구에 발맞추어 채용 및 시험방법, 장애인 의무고용, 교육·배치 및 승진, 장기교육훈련 제도, 복지제도, 육아휴직 제도 등 고용상의 비차별 문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③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분야** : 2013년 마련된 노사협의회 및 2021년 설립된 2개의 노동조합이 운영되고 있는데 인권영향평가 요소를 모두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결사·단체교섭의 자유, 노동조합 활동 불이익 처우 금지, 단체교섭 보장 및 성실한 이행, 노동조합 부재 시 대안적 조치를 모두 이행하면서 정량평가 100점 만점을 기록하였다.

**④ 강제노동의 금지 분야** : 노동시간에 대한 근로기준법 준수 및 근로시간 제시, 연차 및 유급휴가 등 인사관리규정에 명시하며 제도적으로 직원의 강제노동 금지를 이행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업자 및 협력 기관 등에 의한 강제노동 예방에 관련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계약절차에 강제노동 금지 등을 규정하는 인권 존중 이행서약을 징구하고, 준수 여부를 적절한 방법으로 모니터링하는 방안 등 구체적 이행사항 평가에 대한 조치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⑤ 작업장 환경 및 안전보장 분야** : 건물 내 비상탈출구와 완강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용방법의 안내 및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실제 이용에 따른 안전 점검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던 점, 취약 노동자 안전과 위생 조치에 대하여도 안내 표식 등이 부족한 점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안전보건 교육 정보제공 및 건강검진비 지원, 실손보험 지원, 산업재해 피해노동자 지원 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실행함으로써 향후에도 직원들 안전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⑥ 공급망 인권 증진 및 보호 분야** : 협력 기관과의 계약을 진행할 시 협력기관의 인권보호 의무행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 협력기관 인권보호 준수 모니터링을 파악할 수 없는 점 등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⑦ 지역사회 인권 증진 및 보호 분야** : 지역주민 우선고용, 사회공헌, 지역업체 우선 계약과 생산제품 우선 구매 등의 지침을 적용하고 있다. 인권침해 여부를 모니터링하거나 시정조치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지만 지역사회 인권침해 지원까지 포괄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정량평가 50점을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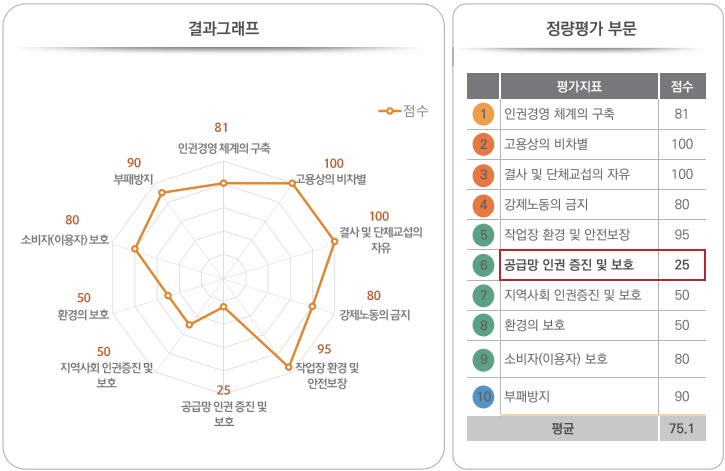
**⑧ 환경의 보호 분야** : 환경개선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지는 않았으나 직원 환경교육, 실내 공기 질 개선, 실내 적정온도 설정, 분리수거, 친환경 차 수입 등의 환경보호를 위한 실천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그러나 물 소비량, 에너지 소비량, 폐기물 배출량 등 연구원 내 환경영향에 관련된 모니터링과 예방적 조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⑨ 소비자(이용자) 보호** : 충남도민이나 이해관계자들이 연구 결과를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연구결과를 가공하여 배포하는 점, 연구원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로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점,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전산관리규칙, 보안업무처리규칙 등에 따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하고 개인정보를 관리하는 점, 직원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교육 및 정보보안교육을 하는 점 등이 소비자 알권리 보장 및 개인정보 보호를 실행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다만, 정보 내용과 범위의 불충분성, 정보 접근성 및 정보 검색 기능 미흡 등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평가하였다.

**⑩ 부패 방지 분야** : 충남연구원 임직원 행동강령을 통해 부패 방지와 깨끗한 공직 풍토조성을 위해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행동강령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준수되어야 할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 이득의 수수금지, 건전한 공직 풍토의 조성, 위반 시 조치로 구성되어 있으나 임직원에게 제대로 전달되거나 관련 내용의 교육 수행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처럼 낮은 정량점수로 평가받은 분야는 공급망 인권 증진 및 보호, 지역사회 인권 증진 및 보호, 환경의 보호로서 개선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높은 정량점수로 평가받은 분야도 지표와 현실이 괴리가 발생하고 있어서 마냥 잘했다고 자만하기에는 곤란하다. 조직 내부 인권경영 향상에 집중됨에 따라서 연구원을 둘러싼 협력관계, 이해당사자에 대한 인권보호에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여서 이 분야의 관심도 필요하다.

| 그림 3 | 충남연구원 인권영향평가 분석결과(정량평가 부문)



충남연구원  
인권영향평가에  
따른 향후  
숙제는  
무엇인가?

향후 충남연구원 인권영향평가는 구성원에게 널리 공유되고 확산하여 다양하고 깊은 소통방식의 조직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숙제가 몇 가지 있다.

첫째, 인권영향평가 목적을 분명히 설정하고 구성원과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필요하다. 인권관점으로 조직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연구원 인권경영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인지, 연구원 구성원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것인지, 연구원 구성원의 인권성찰을 위한 것인지 등 인권관점으로 조직의 모습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하다. 둘째, 충남연구원 실정에 맞는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인권경영체크리스트 지표를 재구성, 수정 및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충남연구원 기관 운영 인권영향평가를 넘어서서 주요 사업, 조직문화와 같은 특정 영역 등에 대한 인권경영평가를 해보는 시도도 필요하다. 넷째, 충남연구원 인권교육과 인권영향평가는 결국 구성원 인권 감수성을 증진하는 과정이므로 서로 연계해서 진행하면 더욱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다. 다섯째, 충남연구원 인권경영센터와 경영진은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모니터링하고 감시하는 활동을 수행하며 제도화로 근접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첫 시도가 건강한 조직문화를 위한 자양분이 되기를 바란다. 이후에는 더욱더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여, 충남연구원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인권영향평가 지표를 수정·보완하고, 구성원의 관심도가 높은 특정 영역에 대한 인권영향평가를 시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 강마야·강수현·공형구·김정희·여형범·전지훈·조봉운(2022), 2021년 충남연구원 인권영향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현안과제연구, 충남연구원.

연구원  
소식

○ ● ○

충남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 대기질 개선 정책 마련 위해 한 자리에  
한산모시 전통농업,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돼야  
포스트코로나 시대, 자영업자 활성화 정책 필요  
지난 5년간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원 총 637건, 12조 원 넘어  
동서트레일의 서축, 한국판 산티아고 순례길로 조성

## 충남연구원 등 4개 연구기관, 대기질 개선 정책 마련 위해 한 자리에

충남연구원(원장 유동훈)은 6월 30일 서울기술연구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제주연구원과 함께 '탄소중립시대 기후대기환경 연구 현황과 지자체 간 공동 연구 방향'을 주제로 제주연구원에서 공동 세미나를 가졌다.

이번 세미나서는 지역별로 나타나고 있는 기후환경 관련 이슈와 현황, 연구교류를 통한 지역 현안 문제 공동 대응, 국비 지원 사업 추진 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충남연구원과 서울기술연구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1차로 지역 맞춤형 대기질 개선 정책 수립과 기후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지난 2020년 8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1년부터 '미세먼지 공동연구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지역 현안문제 발굴과 도로변 비산먼지 현황 조사 ▲지자체별 소형배출사업장(4, 5종) 배출특성 및 관리현황 조사 ▲연구교류 세미나 및 공동학술대회 개최 등을 목표로 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본 세미나는 연구 교류 확산을 위해 제주연구원을 포함한 4개 연구기관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는 제주연구원 신우석 책임연구원이 '제주도 환경이슈와 탄소중립지원센터의 역할'을, 충남연구원 김종범 책임연구원이 '미세먼지 공동연구 협의체와 충남연구원의 역할'을, 서울기술연구원 송민영 수석연구원이 '서울의 기술정책과 환경이슈'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김관철 선임연구원이 '스마트시티 실증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세종대 최우석 교수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환경정책 평가'를 각각 발표했다.

충남연구원 김종범 책임연구원은 "기후변화와 대기오염문제는 어느 한 곳 만이 아닌 지구 전역에 걸쳐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면서 "다만, 지자체의 경우 지역 주민들의 건강 및 환경복지와 밀접하기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주민 친화적인 맞춤형 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를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산모시 전통농업,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돼야

충남연구원, 한산모시 전통농업의 농업 유산적 가치 계승 필요성 제기

한산모시 전통농업이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00년 역사의 한산모시 전통농업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되고 계승될만한 농업적, 문화적, 생태적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기 때문에 '국가중요농업유산'으로 지정·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충남연구원 유학열 연구위원은 최근 'CNI 정책현장' 리포트에서 "한산모시는 우리나라 전통 천연직물로 세계적인 우수성을 인정받아 지난 2011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으로 등재된 바 있다"며 "그러나 현재 한산모시는 재배 농가의 고령화 및 수익성 하락 등으로 인해 그 명맥이 끊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리포트에 따르면, 현재 서천지역 한산모시 재배 농가는 80여 농가에 불과하다. 1990년 초반 1,500여 재배 농가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감한 상태다. 또한 서천지역에 오랫동안 뿌리

내린 재래종 모시인 '조선모시'에 대한 실태 파악 부족 등 모시 풀 유전자원 보호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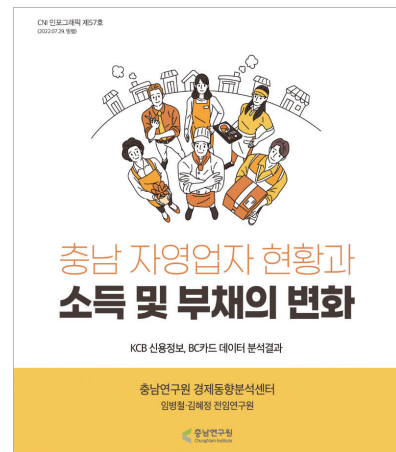
유학열 연구위원은 "충남연구원은 서천군과 공동으로 한산모시 전통농업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추진을 위해 학술용역, 모시 재배지 현장 조사 및 자문, 지역주민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 추진해 왔다"며 "최근 서천군은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신청서를 농림축산식품부에 제출하였으며, 앞으로 다가올 서면·발표·현장 심사에 철저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연말에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 최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가중요농업유산 지정에 따른 정책지원사업으로 ▲모시풀 유전자원 보호 정책 및 재래종 재배 확대 방안 ▲모시농업 후계자 양성 ▲태모시 수매가 보전 및 휴경지 활용 모시 재배지 확대 정책 등 다양한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 포스트코로나 시대, 자영업자 활성화 정책 필요



충남연구원, '지역 내 자영업자 현황 및 소득 변화' 인포그래픽 제작.

코로나19 발생 초기와 올해 상반기를 비교해보니, 충남지역 자영업자의 휴업은 증가했고, 폐업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휴업 가맹점 수는 코로나19 발생 당시 8,799개에서 2022년 4월 15,749개로 증가했다. 78.9%나 증가한 셈이다. 폐업 가맹점 수는 동 기간에 1,773개에서 787개로 줄어들었다. 2배 이상 감소한 수치다.

이중 휴업과 폐업 가맹점의 상위 3개 분야를 보면, 휴업은 여행업, 주점, 광학제품 순이었고, 폐업은 광학제품, 서적·문구, 건축·자재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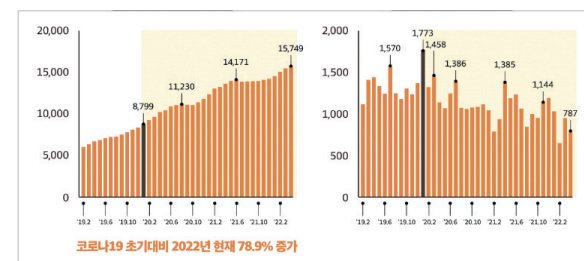
최근 충남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임병철·김혜정 전임연구원은 '충남 자영업자 현황과 소득 및 부채의 변화' 인포그래픽(KCB 신용정보 및 BC카드 데이터 분석)에서 "충남지역 자영업

자는 전국 15개 광역시도 중 5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이전에 전국 평균보다 높았던 연령별 평균소득 증가율의 회복세가 주춤하고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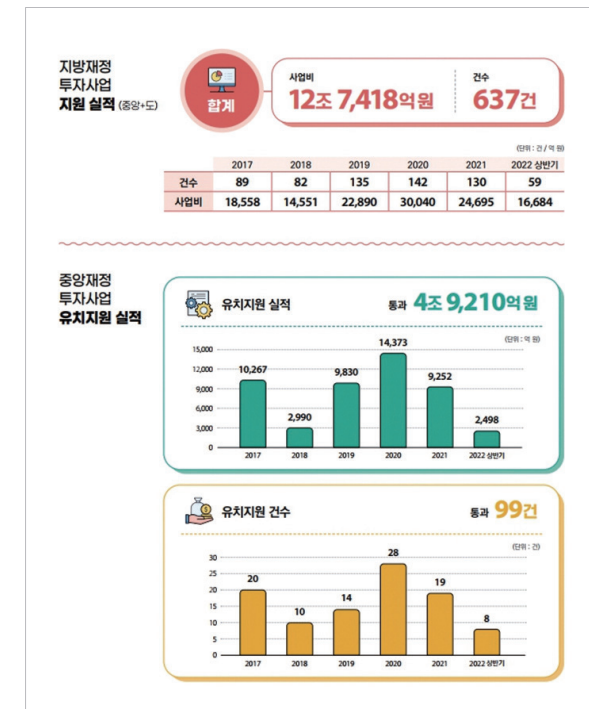
특히 18~29세의 청년 자영업자를 보면, 코로나19 이전(2018년도 1분기)에는 충남의 평균소득 증가율이 2.6%였고, 전국 평균 1.6%보다 1%p 높았으나, 2022년도 1분기에는 충남이 0.2%로 전국 평균 2.6%보다 오히려 2.4%p 낮아진 수치를 보였다.

연구진은 "코로나19 초기보다 대출 잔액 증가세가 일시 둔화하는 모습이지만, 최근 카드론이나 소액대출이 증가하고 있다"며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오는 9월 말 종료되는 코로나19 대출 상환의 추가 연장을 고려하고 있다"며 "대출 상환 연장 여부를 떠나 자영업자의 소득안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단기성 정책에 불과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과 경기회복 속도, 소비트렌드 변화,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 지난 5년간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원 총 637건, 12조 원 넘어



충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5년간의 성과와 과제 인포그래픽 제작.

충남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이하 '공투센터')는 최근 5년간 충남도 및 시군의 재정투자사업 심사지원 실적은 총 637건으로, 총사업비 12조 7,418억 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그중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의 중앙재정투자사업을 통과시킨 지원실적은 총 99건으로, 총사업비 4조 9,210억 원의 성과를 거두었다.

2017년 개소 이후 올해로 5주년을 맞이한 공투센터는 충남도와 15개 시군의 재정투자사업 심사, 출자·출연기관 타당성 검토, 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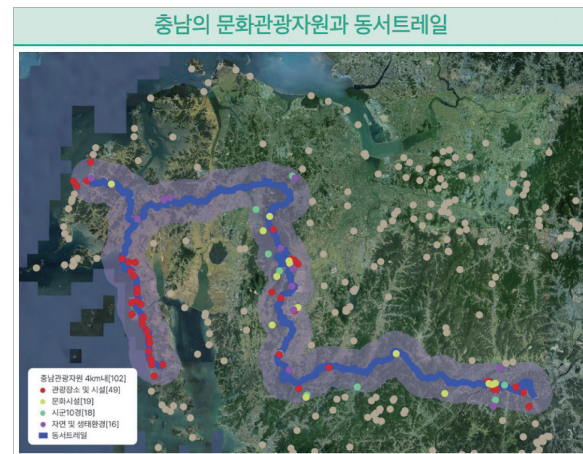
공기업 경영평가 등을 지원해왔다. 또 지난 2020년에는 "충청남도 공공투자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공투센터 업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기도 했다.

김진기 공투센터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만으로는 다양한 부문에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민간투자 활성화가 관건"이라며, "이에 공투센터는 지역의 민간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충남민간투자사업 제안서 전문 검토기관 지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선 8기 충남도 정책변화에 발맞춰 기존 업무 이외에 선도적인 재정투자사업 발굴과 국비 확보를 위한 경제성 분석 등 지원역할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연구원 소식 05 ○ ○ ○ ○ ●

## 동서트레일의 서축, 한국판 산티아고 순례길로 조성



충남연구원, '동서트레일과 충남의 활용 방향' 정책지도 제작.

최근 산림청이 발표한 동서트레일 조성과 관련해 충남지역을 한국판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조성할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동서트레일은 안면도와 울진을 연결하는 총연장 849km 규모의 국도를 횡단하는 숲길로, 이 중 충남은 전체 동서트레일 길 이의 30.7%인 260.5km로 2026년까지 총사업비 127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충남연구원 이상준 책임연구원 등 연구진은 '동서트레일과 충남의 활용 방향' 정책지도에서 "충남 동서트레일은 7개 시군 17개 구간(2개 지선 별도)으로 기존 서해랑길과 내포문화숲길 등 산림적·역사·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숲길 구간이 포함되며 당진버그내순례길, 서산해미천주교순례길 등과 연계되는 한국판 산티아고 순례길처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해랑길, 아라메길, 내포문화숲길, 고마나루길 등 충남에 기 조성된 걷기 길이 동서트레일과 중첩되는 구간은 115km로 분석되었고, 동서트레일 반경 4km 내 연계할 수 있는 문화관광자원은 102개가 분포되어 있는 등 지역 관광 산업 활성화와 신규 관광수요 창출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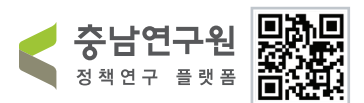
연구진은 "충남 동서트레일은 지역 내 고용인원 72명, 1회 방문 평균 소요 비용과 환경적 가치는 각각 80,298원과 30,087원으로 예상된다."며 "기존 둘레길이나 숲길과는 달리 민-관-주민이 연계되는 사업으로, 방문객의 소비가 지역의 소득으로 연결되고, 구간별 개인이나 기업의 기부문화를 접목해 사회·문화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충남 동서트레일은 지역, 관광, 고용, 건강이라는 키워드를 중점 활성화한다는 목표로 기존 자원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특히 충남 '걷쥬' 앱과의 연계로 생활 속 걷기와 산책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인식 개선,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 연구원 발간물 ○ ○ ● ○ ○

CNI  
정책현장인류의 자산인 서천 갯벌과 유부도  
정옥식 선임연구원한산모시 전통농업의 농업유산적 가치 계승  
유학열 연구위원인포  
그래픽카드 데이터로 보는 충남관광관련 소비지출  
이인재 초빙책임연구원, 이종윤·안수용 연구원충남 자영업자 현황과 소득 및 부채의 변화  
임병철·김혜정 전임연구원정책  
지도충남 고라니 중심 로드킬 현황과 예방 대책  
김원철 연구위원, 김윤식 연구원동서트레일과 충남의 활용 방향  
이상준 책임연구원, 권미정 연구원, 전수광 연구원

QR코드를 스캔하면 YouTube채널로 연결됩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CNI 정책연구 플랫폼 채널로 연결됩니다.

# 열린충남

## THE CHUNGNAM INSTITUTE

충남연구원은 도민의 더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겠습니다.

맑고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역사와 전통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앞선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며  
풍요롭고 건강한 정신으로 활기찬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바로 충남도민의 모습입니다.

희망찬 충남의 미래를  
충남연구원이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우) 32589 충남 공주시 연수원길 73-26 (금흥동)  
TEL 041-840-1114 FAX 041-840-1129 <http://www.cni.re.kr>

“환경을 먼저 생각하는 작은 실천”  
본 인쇄물은 재활용 가능한 용지로 제작되었습니다.